

처음 그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자료집 순서

제 6 차 총회선언문

1. 주요 사업보고 및 계획

2. 활동기구 사업보고 및 계획

활동 기구별 경과보고	9 쪽
●시민사업국	21 쪽
●문화사업국	24 쪽
●시민감시국	
의정감시센터	26 쪽
사법감시센터	28 쪽
맑은사회만들기본부	30 쪽
납세자운동본부	32 쪽
●시민권리국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37 쪽
아파트공동체연구소	39 쪽
●정책실	
경제민주화위원회	41 쪽
사회복지위원회	43 쪽
시민과학센터	44 쪽
●참여사회연구소	46 쪽
●참여사회아카데미	48 쪽
●월간 참여사회	50 쪽

3. 회계보고 및 결산

52 쪽

4. 정관개정안

75 쪽

5. 임원명단 및 주요임원 경력

82 쪽

6. 참여연대기구표, 사무처직제

86 쪽

시민의 힘으로 참여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자

지난 6년간 참여연대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사회보장의 확대와 인권의 실현을 통한 참여적 민주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해 왔다. 국가권력과 시장권력의 부패와 일탈, 무사안일을 향해 던진 참여연대의 비판은 민의 감시 앞에 어떤 성역도 존재할 수 없음을 증명하였으며, 권력은 권력자들의 힘이 아닌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그간의 노력은 각종 제도와 정책 그리고 실태를 개선하는 성과를 남겼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 해왔다. 그 동안 참여연대는 권력자들에게는 무서운 회초리이자, 국민에게는 권익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의 부분적 성과에 만족하거나 안주할 수 없다. 그러기엔 우리를 둘러싼 현실이 너무도 냉엄하고, 가야할 길 또한 멀다.

4월 총선을 앞둔 현 정치·사회적 상황은 시민사회를 속박하고 있는 권력의 포승줄이 얼마나 억세고 질긴 것인지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정파와 정당을 막론한 정치독점, 기득권 세력의 담합과 저항은 어떠한 대의명분도 거스를 준비가 되어 있다. 색깔론과 지역주의, 흑색선전 등 낡은 정치의 폐해는 합리적 상식의 선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삼시간에 시민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보수언론은 교묘한 논조로 이를 끊임없이 현혹하고 있다. 독점제벌들 또한 이 틈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와 실리를 관철하기 위한 세력화에 나서고 있다. 이 권력의 장막과 포위를 뚫고 시민사회가 진정한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된 일인지 우리는 다시금 깨닫고 있다.

우리는 당면한 부패정치인 낙천·낙선운동이 정치개혁, 나아가 한국사회의 총체적 개혁의 시금석이라고 인식한다. 그간 기성 정치집단이 우리 국민에게 안겨준 것은 불법과 타락으로 점철된 부패한 정치현실에 대한 냉소와 혐오감뿐이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더럽히고 탕진한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실망할 것도 분노할 것도 없다.

이미 자신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정치권의 손에 이대로 국민의 주권을 맡겨 둔다면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을 추방하고, 유권자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낙천·낙선운동에 나선 것이며, 유권자 절대 다수의 열망이 또한 이와 같다는 것을 명백히 확인하였다. 때문에 낙천·낙선운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에 비추어 볼 때 하등의 문제가 없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이에 대한 실정법의 제약요인이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다. 우리는 공천반대 운동에 대한 대다수 유권자의 지지와 열망을 외면하고 또 다시 정치적 구태를 반복하고 있는 정치권에 준엄한 심판을 경고한다. 우리는 오늘 참여연대의 모든 회원이 낙천·낙선운동의 전령사가 되어 유권자의 이 명예로운 혁명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을 결의한다.

지금 우리는 인간다운 삶이 더욱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자본의 범세계적 운동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무한경쟁과 시장만능주의를 부추기며 전지구적인 민주주의의 후퇴와 삶의 질 악화를 불러오고 있다. 지난 IMF관리체제하의 경제위기에서 확인되었듯이 세계시장의 동요에 따라 국민들의 피땀어린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사회보장기능과 경제관리 기능은 파괴되고, 빈부격차는 심화되며, 국가의 장래가 송두리째 위협받게 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50년만의 정권교체를 통해 탄생한 '국민의 정부'는 근대화 과정에서 고착된 개발독재체제를 청산하는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독점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복지 없는 성장주의 정책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소수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는 변화가 없고,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 고실업, 고용불안 등 새로운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으로 상징되는 반공·냉전적 사회질서와 지배구조는 기존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개혁의 정체는 보수적인 기득권세력의 저항뿐 아니라 현 정권이 개혁의 대의보다는 기존의 관료적 구조에 안주함으로써 더욱 심화되어 왔다. 국민의 정부 2년은 시민·사회운동의 적극적인 행동과 압력이 없으면, 개혁이 확산·심화되어 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상황을 적시하며, 한국사회의 총체적 개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시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경제정의의 추구, 각종 사회적 차별의 해소,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평화 공존체제의 정착, 분권과 자치에 기반한 참여민주사회 구현 등 보다 인간답고 희망적인 미래를 위해 우리는 부단히 행동할 것이다.

지난 수년간 한국의 시민·사회는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NGO의 시대'라는 압축된 표현처럼 시민사회의 확대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되고 있으며, 그 사회적 비중과 영향력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리는 지난 6년간 그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동시에 큰 책임의식을 느낀다. 시민사회는 외형의 성장에 비해 아직 그 내실은 매우 취

약하다. 광범위한 시민대중의 실질적 참여와 결집을 이루고 있지 못하며,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생존'의 문제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는 시민·사회운동 나아가 시민사회발전은 참여하는 시민의 역량에 달려있음을 깊게 인식하고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의 회원확대와 시민참여의 실현은 물론 각 부문·지역·계층과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여 시민사회의 개발과 조직에 나설 것이다.

희망적인 미래는 오늘의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주체적 실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밟달고 선 현실 또한 지난 시기 흘린 땀의 결실에 다름 아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아직 누구도 개간하지 않은 거친 광야가 펼쳐져 있다. 많은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하는 새 천년, 정의롭고 인간다운 사회의 결실을 위해 다시 땅을 고르고 **씨를 뿌리자.**

1. 주요사업보고 및 계획

■ 1999년 사업보고 및 2000년 사업계획

< 총 평 >

I. 성과와 한계

· 성과

1. 시민운동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

소액주주운동, 작은권리찾기운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특별검사제 도입과 정착을 위한 노력,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 부패정치인 낙천 낙선 운동 등 권력감사와 정치개혁 과제 수행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대변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로서 확고한 위상을 확보하고 전체 시민운동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에 기여.

2. 조직 확대와 내실화

총회원 수 7,400여 명, 월 400명 이상의 자발적인 회원증가, 전년 대비 회비 100% 증가, 회비에 의한 사무국의 재정충당을 70%내외, 다양한 회원자치모임의 결성과 운영, 상근진의 보강 등 조직의 성장 동시에 운영상의 내실을 다지는 성과가 있었음.

· 한계

1. 회원참여활동 조직화 부족

- 회원 및 회비의 증가, 신입회원 한마당 등 회원프로그램의 정례적 운영과 회원들에 의한 회원관리 등 조직사업의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회원 참여와 의사수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자원활동가들에 대한 교육 등 체계적인 자원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2. 전 사회적 이슈 및 전국적 국민행동에 한계

- 이동통신 전파사용료 폐지, 부풀어진 보험약가를 폭로하여 1조2천여억원에 이르는 보험제정의 손실을 막는 등 시민들의 권익향상에 구체적으로 기여했음에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함.

- '96 맑은사회만들기 운동, '97 작은권리찾기운동, '98 소액주주운동과 같은 전 사회적 이슈를 개발하고 전국적 국민행동을 조직하는 활동에 착수하지 못함.

3. 중앙의사결정기구 역할 미흡

- 운영위원회 등 대의기구에서 임원의 참여가 저조하여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함

II. 2000년 사업기조

지난 해 사업의 일정한 성과와 더불어 국내에는 시민운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런 저변확대로 시민참여형 운동이 적극 전개될 수 있는 대중적 조건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바탕에서 참여연대는 2000년에 조직안정, 시민참여 확대라는 한 축과 정책전문성 강화의 다른 축을 중심으로 정선된 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집중 추진, 일관된 성장을 꾀할 수 있다.

· 방향

1. 각 사업단위별 중장기 과제 개발
 - 21세기 대안적 국가비전 확립을 위한 단계별 시민운동 전략 수립, 대안 마련
2.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조직의 안정성, 역동성 강화
 - '작은권리 1인 1제안 운동' 등 생활실천운동 조직
 - 다양한 시민캠페인과 연결된 시민행동단 조직
3. 사이버참여연대 등을 통한 회원, 시민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강화
 - 온라인 회원가입가능, 회원광장의 대화채널 다양화, 각 사업단위별 QA제도
 - 사이버 투표, 사이버집회, 사이버 토론회 등 사이버 시민행동 개발
4. 업무전문성과 정책 기획 역량 강화
 - 각 분야 개혁적 전문가 영입, 정책위원회 활성화
 - 사무실활동가의 교육, 연수프로그램 조직, 추진
5. 운영기구의 대의성 강화
 -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의 강화, 현실화
 - 회원자치모임의 다양화
6. 지역 시민사회 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 국감연대, 총선연대 활동등을 통해 확보된 지역의 다양한 단체들과의 전국적 네트워크 강화

• 2000년 주요사업

< 주요정책사업 >

- 예산감시 납세자운동
 - 정보공개청구운동의 확대 발전
 - 세제, 세정 개혁운동
 - 정부 및 산하기관 예산감시운동
- 2000년 총선 낙천·낙선 운동
 - 선거법 개정, 부패정치인 낙천 낙선운동 등 정치개혁 캠페인 전개
- 재벌개혁을 위한 소액주주운동
 - 5대 기업에 대한 소액주주운동
 - 주총 참가, 주주대표소송, 장부열람권 행사,
- 작은권리찾기운동
 - 시민권리 증진을 위한 100 대 기획사업 추진
 - 공익소송등 기획사업 강화
- 사이버 참여연대
 - 실물참여연대와 연계한 사이버 시민운동전개
 - 쌍방향통신 강화 통해 사업모니터링 및 의견수렴 기능 강화
- 아름다운 재단 설립
 - 공익적 기부문화 활성화 캠페인
 - 유산 1%남기기 운동

< 주요조직사업 >

- 임원진 개편과 논의구조 개선 통한 대의기구의 정상화
- 회원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 100가지 개발
- 자원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및 운용시스템 체계화
- 전문가 인력 층의 확대등 사업부서의 활동인력 확대
- 전사회적 이슈를 통한 지역공동체조직과의 네트워크 강화
- 재정사업의 다각화와 회비증가를 통한 재정안정화
: 실질회원 20,000명, 월회비 7,500만원

2. 활동기구 사업보고 및 계획

■ 1999년 경과보고(활동 기구별)

<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

- 1. 25 (주)대교와 학습지 교사의 보증금(11억) 반환관련 증제 타결
- 2. 4 학습지 2개사 상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제기
- 2. 12 은행연합회 상대 신용불량자 효력정지처분신청 제기
- 2. 23 초등학교의 어린이신문 강제구독 관련 교육부 감사요청
- 3. 26 씨티폰 통화품질에 대한 참여연대-한국통신-정보통신부 공동실사
- 4. 1 검찰의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지침 관련 청와대, 법무부, 국회에 진상조사 요구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4. 9 씨티폰 사업퇴출 관련 성명서
- 4. 21 씨티폰 기본료환불 재정신청 심결(심결연장)
- 5. 11 검찰의 긴급체포권 남용 관련 국가상대손해배상청구
- 5. 11~14 67개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 시행 실태 및 시민인지도 조사
- 5. 24 씨티폰 기본료환불 재정신청 기각
- 6. 3 67개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및 시민인지도 조사평가 결과발표
- 6. 5 지하철 운행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 6. 11 검찰의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지침 관련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승소
- 6. 17 시내전화요금 인상반대 논평
- 7. 7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소송 추진 기자회견
- 7. 23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소송 1차 주민설명회(경기 김포시)
- 7. 28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소송 2차 주민설명회(경기 부천시)
- 8. 24 전파사용료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및 전파법 개정청원
- 8. 27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소송 3차 주민설명회(서울 강서·양천구)
- 9. 4 정보통신부의 전파사용료 폐지방침 환영논평
- 9. 16 한국통신 전화설비비상환운동 추진 기자회견
- 9. 25 한국통신 전화설비비 상환촉구 정보통신부 앞 집회
- 10. 3 '98년 지하철 사고원인 분석자료 발표'
- 10. 5 전화설비비 상환촉구 1차 시민서명운동 발대식(명동)
- 10. 12 전화설비비 상환촉구 2차 시민서명운동(명동)
- 10. 19 전화설비비 상환촉구 3차 시민서명운동(명동)
- 10. 26 전화설비비 상환촉구 4차 시민서명운동(명동)
- 11. 2 전화설비비 상환촉구 5차 시민서명운동(서울역)
- 11. 9 전화설비비 상환촉구 6차 시민서명운동(서울역)
- 11. 16 전화설비비 상환촉구 7차 시민서명운동(서울역)
- 11. 16 김포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신청
- 11. 18 한국통신 상대 시내전화요금원가정보공개거부취소 청구소송 제기
- 11. 23 전화설비비 상환촉구 8차 시민서명운동(서울역)

- 11. 30 전화설비비 상환촉구 9차 시민서명운동(서울역)
- 11. 24 한국통신의 시내전화 재가입전환 방침에 대한 논평
- 11. 26 시내전화 요금인상 반대 2차 성명
- 12. 2 정보통신부, 한국통신에 시내전화 설비비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 12. 7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 전과법 개정 의견서(전과사용료 폐지관련) 발송
- 12. 7 전화설비비 상환촉구 10차 시민서명운동(서울역)
- 12. 9 한국통신 본사 앞 전화설비비 상환촉구 집회

< 참여사회아카데미 >

- 3. 22 참여사회아카데미 10기('99 봄학기) 개강.
- 5.11~7.27 참여사회아카데미 특별기획강좌 '새로운 천년을 향한 준비'(세계편)
'세계사적 나침반은 어디에?' 개강
- 6. 14 참여사회아카데미 11기('99 여름학기) 개강
- 9. 14 참여사회아카데미 12기('99 가을학기) 개강
- 9. 14.~11. 30 참여사회아카데미 특별기획강좌 '새로운 천년을 향한 준비'(한국편)
'20세기 한국사회 돌아보기' 개강
- 1.8 ~12.24 일등여수아카데미(여수시청 위탁교육) 총 48회 강좌

< 경제민주화위원회 >

- 1.14 5대제별 소액주주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
- 3. 20 삼성전자, SK 텔레콤, (주)대우,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참가
- 4. 22 현대전자 주가조작 규탄집회
- 4. 27 현대전자 주가조작 관련 금감원 제조사 촉구 집회
- 5. 6 재벌개혁 감시단 발족 기자회견
- 5. 10 현대중공업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제기
- 5. 12 현대증권불거래운동 캠페인(1차)
- 5. 13 재벌의 데이콤, 한국중공업 인수 저지를 위한 시민단체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
- 5. 19 현대증권 불거래운동 캠페인(2차)
- 5. 19 삼성전자 주주총회 일부결의취소소송 제기
- 6. 3~4,10~11 사외이사를 위한 참여연대 특강
- 5. 26 현대증권 불거래운동 캠페인(3차)
- 5. 31 (주) 대우 주주대표소송 제기
- 6. 2 현대증권 불거래운동 캠페인(4차)
- 6. 9 현대전자 주가조작 정주영일가 형사고발
- 6. 9 현대증권 불거래운동 캠페인(5차)
- 6. 16 현대증권 불거래운동캠페인(6차)
- 6. 23 현대증권 불거래운동캠페인(7차)
- 6. 23 재벌개혁감시보고서 발간
- 6. 24 SK텔레콤 유상증자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 6. 29 제일은행 자본금감소명령처분일부취소청구소송 제기

- 6. 29 제2금융권 소유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토론회
- 7. 1 현대중공업 상대 위자료 청구소송 제기
- 7. 6 이견회회장일가의 삼성생명 위장지분 소유와 탈세혐의에 대한 조사 촉구 기자회견
- 7. 14 긴급토론 "삼성자동차 문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 8. 9 청운회계법인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8. 26 SK텔레콤 임시주주총회 참가
- 9. 6~9 현대전자 주가조작 정주영일가 사법처리촉구집회(총3회)
- 9. 15 현대 주가조작, 삼성 변칙상속,대우 구조조정 관련 시민사회노동단체 공동기자회견
- 9. 22 현대전자 주가조작 축소수사 항의집회
- 10. 5~9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
- 10. 12 현대전자 주가조작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 11. 12 기업지배구조 개선안 입법청원
- 11. 17 삼성SDS 사들 배임죄로 고소
- 12. 1 삼성SDS BW관련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 12. 13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촉구 교수, 변호사 공동 성명
- 12. 29 삼성전자 주주총회 결의일부취소소송 재량기각

< 조세개혁팀 >

- 2월 세무사 등 공무원 자동자격부여제도 실행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공개)
- 3월 '1999년 세제·세정 10대 개혁과제' 선정 발표
재정부의 '과세특례제도 존치'결정 철회요구(논평)
국세청 소득세과·법인세과·부가가치세과·재산세과 보존문서 기록대장
정보공개청구(비공개→행정소송→5월 전부공개)
국세청 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상 책정된 포상금 액수 및 용도문서(부분공개)
- 4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6의 2호' 폐지요구(성명)
- 5월 세제·세정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시민·노동단체 공동기자회견
국세청 징세과 보존문서 기록대장 정보공개청구
- 6월 '조세형평실현과 자영자 소득과약을 위한 조세개혁'을 요구하는 거리캠페인및 서명(2회)
금융노련, 사무금융노련, 언론노련 산하 기관에 조세개혁 포스터작업
자영자소득과약위원회 참가
정부의 금융소득종합 과세유보결정과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제도의 문제점지적(논평)
동아일보 프로젝트 기획기사 연재시작(10회)
98년 시작된 국세청 표준소득률 산정근거자료 정보공개청구에 일부 공개
<민변>에 세제·세정개혁에 대한 교육
- 7월 '세액공제'를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공제제도에 대한 수정 입법청원안 제출
각 업종별 소득세신고내용 분석자료 정보공개청구(비공개)
사회복지위원회와 조세팀 내부토론회
- 8월 8.15 경축사 앞두고 대통령에 조세개혁의견서 제출
재정부 세제개혁안에 대한 참여연대 조세팀 입장 발표(논평)
'1999년 세제개혁안 평가와 중장기 추진과제' 토론회 개최
- 9월 당정협의과정에서 부가세법 개정안

- 국회제출자체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비판(성명)
 김대중 정부의 조세개혁정책 실행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공동기자회견
 자영자소득과약위원회 과행에 대한 규탄(성명)
 상속증여세법 위법여부 확인을 위해 이진희·이재용씨
 재경위 국감 증인소환 요청 (공문/의견서)
 10월 국세청의 삼성그룹 이재용의 증여세 포탈혐의에 대한 조사촉구(성명)
 중앙일보 홍석현 탈세사건에 대한 입장발표(논평)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방청 무산
 국세청 공무원 대상 교육(3회)
 시민로비단 교육
 작은권리찾기 자원활동가 교육
- 11월 재경위 법안심사소위 간이과세기준 상향조정시도 중단요구(논평)
 조세개혁 촉구 서명과 의견청원제출(금융노련/사무금융노련/언론노련/참여연대)
 재경위 법안심사소위 변칙결정 규탄(성명)
 3당 정책위원장과 법사위원장에 간이과세 상향기준을 '범'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공문 발송
 (의견서)
 재경위 통과 세법개정안 전반에 대한 비판(성명)
- 12월 국회의 부가세법 개정(안) 수정통과에 대한 재경부 공식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자영자소득과약위원회 민간위원 사퇴(성명)
 정기국회의 조세개혁후퇴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 연대집회

< 사회복지위원회 >

1.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회기내에 반드시 제정요구 성명서 발표
1. 18~2.27 제16기 사회복지실습
2. 3 '실업상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보고서 공개요구 성명서 발표
2. 9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중간결과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
 성명서 - 보험 약가 인하조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길 -
2. 10 보건 보건복지부장관 직무유기고발
 - 생활보호법 5조 2항 「최저생계비 공표의무」 위반
2. 24 '의료보험 3개월 연체시 보험혜택을 제한하도록 한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은 개정되어야 한다.' 성명서
2. 25 '의약분업 실시 연기 방침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성명서
3. 2 국민연금 확대 실시에 대한 시민노동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3. 2 '시민노동단체들의 국민연금 확대 연기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긴급보도자료
3. 3 시민노동사회단체, 국민연금 확대 실시와 관련하여 김대중 대통령과 여·야 총재에
 면담 요청
 종교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 범연 *확인
 기자회견 - 기초생활보장법 등 저소득 실직자 생계대책 수립 촉구 및 시민행동사업
3.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 종교 시민 노동사회 학생단체의
 범국민운동 연대 참가 제안' 제 사회단체에 2차 제안서 발송
3. 10 '「조세행정체계 개혁 및 자영자소득 과약위원회」설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성명서
3. 11 '조속한 보험약가 인하조치를 촉구한다' 성명서

3. 12 '정부, 여당은 정년 개혁을 포기하려는 것인가' 성명서
- 전국민연금 확대실시, 의약분업 등에 대한 근본적 대책없는 연기논의는 있을 수 없다
3. 17 '저소득실직자 및 장기실업자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 정부의 복지병 주장 VS 국민 생존권 보장
3. 1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 종교 시민 노동사회 학생단체의 범국민운동 연대 참가 제안' 제사회단체에 3차 제안서 발송
3. 23 '참여연대,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에 대한 한시적 반환 일시금 수급권 부여에 찬성' 성명서
- 그러나 소득이 확실한 사람에게까지 수급권 확대는 연금제도에 역행하는 것
3. 26 '저소득 국민과 빈곤장기 실직자 대책 마련을 위한 종교 노동 시민단체와의 면담요청' 공문 발송 (수신: 이회창 총재, 조세형 총재권한 대행, 김종필 국무총리, 김영배 총재권한 대행)
4. 2 참여연대, 정부 실업대책 사업 전반 재평가를 위한 정보공개청구 - 직업훈련, 공공근로, 실업자대부, 지역별 실업실태, 전달체계 등 실업대책 재평가 및 상설직 감시 착수
4.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촉구 1차 행동기간 돌입
4.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즉각 제정하라' 성명서
4. 8 참여연대, 보건복지부에 「보험약가 실지재가 현지조사」 결과 정보공개청구 및 성명서
4. 15 '정부는 밀빠진 독을 먼저 메워야 한다.' 성명서
- 공적자연금에 대한 제도개혁청사진을 먼저 마련하라
- 4.22 '저소득 실업자와 장기실업자 대책 마련을 위한 종교 노동 시민단체 면담 요청' 공문 발송 (수신 : 김한길 수석, 김유배 수석, 김경섭 사회예산국장)
- 4.23 '전반적인 세정·세계 개혁을 통한 정확한 소득과약 방안을 마련하라' 성명서
-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저소득 및 장기실직자들의 생존권을 외면 말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즉각 제정하라
- 4.3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업국복지역본부 및 실업관련지역협의회에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참가 제안
- 5.7 최근 직장의료보험료 인상 관련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5.17 '의료보험 수가인상이 보험약가 이하의 전제조건일 수 없다.' 성명서
- 수가인상 그 폭은 정확한 조사를 근거로 추진되어야 하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증가를 억제하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병행해야 한다.
- 5.18 '최근의 국민연금 논란에 관한 노동 농민 시민 사회단체의 입장' 성명서
- 5.19 '정기국회 전까지 세정·세계 개혁안을 마련해야한다.' 의견서 국무총리실에 제출
- 참여연대 「자영자소득과약위원회」 운영 개선안 및 자영자 소득과약을 위한 제도개혁안
- 5.21 '신임 복지부장관은 복지개혁을 할 전문성과 개혁성을 검증받은 인사가 되어야한다.' 성명서 - 개각 논의에 즈음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입장
- 5.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 전국대표자 회의 개최
- 5.2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제2차 전국 행동 기간 돌입
- 5.26 '4대사회보험통합 방안에 관한 대토론회' 개최
- 5.26 '4대사회보험통합! 의보료 국고보조 약속이행! 고소득 자영자과약 촉구대회'
- 6.14 '추경편성과 중산층 및 서민계층 지원방안에 대한 시민 종교 사회단체의 의견제시'를 위한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 요청
- 6.14 '최근 정부의 중산층 및 서민계층 육성방안과 관련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 성명서' 발표
- 6.16 '추경편성과 중산층 및 서민계층 지원방안에 대한 시민종교사회단체의 의견서' 제출 (수신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

- 6.22 '대통령의 국민생활보장 기본법의 제정의지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의 성명서' 발표
- 6.24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제정 요청'과 관련한 제시민 종교 여성 노동단체의 면담 요청
(수신 : 어준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 박시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 김홍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 황규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 조성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 이성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 김명섭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 한나라당 이상득 정책위의장, 한나라당 이부영 원내총무, 국민회의 장영철 정책위의장, 국민회의 손세일 원내총무)
- 6.28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제정 요청'과 관련한 제시민 종교 여성 노동단체의 면담 요청 (수신 :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 정세균 의원)
- 6.28 '복지부의 지역의보 재정지원 확대 방침을 환영한다.' 성명서
- 기획예산처는 복지부의 지역의보재정지원 확대방침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6.29 '읍면동 기능전환에 관한 정책 토론회 개최'
- 7.2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제정 요청' 과 관련한 제시민 종교 여성 노동단체의 면담 요청
(수신 : 김유배 복지노동수석 김성재 민정수석, 김영배 총재권한 대행)
- 7.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촉구' 서한
(수신 :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박준규 국회의당 김영배 국민회의 총재권한 대행님)
- 7.5 '사회안전망 구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한 촉구대회' 및 여야총재 면담
- 7.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의 심의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의견서' 발송 (수신 : 김홍신 의원 이성재 의원)
- 7.13 '보건복지상임위원회 공충석 전문위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 검토내용에 대한 항의 의견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소속 의원들에게 발송
- 7.13 '제205회 임시국회 회기 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라' 성명서
- 7.13 '여야 정치권은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즉각 제정하라' 성명서
- 7.21 임시국회의 조속한 개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 연대회의 기자회견
- 7.22 의보통합 연기 및 재정분리기도 저지를 위한 노동, 농민,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7.27 '의보통합연기와 국민연금재정분리 저지 및 조세개혁 촉구대회' 및 여야 총재 면담
- 7.30 '즉각적인 보험 약가 인하로 의보제정의 낭비를 막고 보험료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 성명서
- 8.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촉구한다.' 성명서
- 8.10 '국민의료보험공단 노사는 성실한 대화로 조속히 공단운동을 정상화해야 한다.' 성명서
- 정부는 의료보험 장기파업사태를 적극 중재 해결하라 -
- 8.16 '개발시대의 청산과 새 천년을 향한 사회정책의 새로운 비전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 대통령 경축사중 사회부문 - 논평 발표
- 8.19 '문명사회에서 어찌 이런 일이...'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야만적인 불법강제불입 수술에 대한 참여연대 성명
- 8.26 '개발시대를 청산하는 [새로운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구축을 촉구한다.' 8.15경축사 및 정부 후속대책에 대한 사회단체 입장 성명서 및 공동기자회견
- 8.30 자영업자소득과악위원회 합의사항에 대한 국무총리보고 누락과 임의변경에 대한 위원들의

- 공개질의 및 총리면담요청, 시민노동단체의 성명서 발표
- 9.3 '생활보호예산삭감은 부당한 처사이며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는 이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의견서 (수신: 국회의 정책위의장, 국회의 제3정책조정위원장, 국회의 보건복지위의원, 계수석, 민정수석, 복지노동수석, 기획예산처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 9.6 '저소득층의 생계보장예산은 절대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성명서
- 9.7 '한국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모색'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단체 대토론회
- 9.8 '생활보호예산삭감은 부당한 처사이며 대상자 확대와 사회복지전문요원확충 등을 위한 예산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의견서 (수신: 국회의 정세균 제3정책조정위원장)
- 9.10 '예산없는 생산적 복지, 허구일 뿐이다' - 2000년 예산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명서
- 9.13 2000년 정부 복지예산에 관한 시민사회노동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 9.14 사회복지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노동 시민 사회단체 집회
- 9.15 '사회복지시설 내 강제불임, 무엇이 문제인가?' 시민사회단체 연합 공청회 개최
- 9.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설명회 및 제정축하의 밤
- 9.20 '사회보험개혁의 최우선 과제, 의료보험통합은 정치적 거래로 무산되어서는 안됩니다. -최근 의보통합의 정치적 거래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시오' 절의서 (수신: 한화갑 국회의 사무총장 김중권 청와대 비서실장 정균환 국회의 총재특보)
- 9.22 '국민의 정부인가? 공무원의 정부인가?' - 공직자연금문제는 선제도개혁 후기급지원이 원칙이다.' 성명서
- 9.27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 사회 농민 노동단체 공동기자회견
- 10.9 '국민을 무시한 정부여당의 의보통합 연기 추진을 절대 반대한다. -국민건강권 확보와 사회통합을 위한 의보통합은 정치적 흥정물일 수 없다.' 성명서
- 11.4 의료보험통합연기를 반대하는 사회복지학과 교수 100인 선언 및 기자회견
- 11.8 사회복지시설 내 강제불임 관련, 시민사회단체 장관 면담 및 공개 요구 - 총리사과, 진상조사, 국가배상 등 요구
- 11.22 '정부는 최저생계비 결정과정에서의 부당한 압력행사를 중지하라.' 성명서
- 11.26 예결특위 활동에 즈음한 2000년 보건복지예산에 대한 의견서
- 11.26 '국회는 심화되는 빈곤문제와 서민생활붕괴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 아파트공동체연구소 >

1. 14 임대주택관리법 제정사업을 위한 지역단체실무자회의 (주거연합)
1. 23 수도권 지역 5년 장기임대아파트(분양진환관련) 주민모임 개최
1. 25 아파트공동체연구소 1월 실행위원회회
1. 29 대구내당 재건축조합 변경인가와 관련, 건설교통부의 상반된 유권해석에 대한 공개해명과 관계자 책임을 촉구하는 의견서 발송
2. 3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한강아파트 동대표 교육실시
교육내용 : 아파트 관리권 인수인계 과정
2. 8 주공장기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근거 정보공개청구과 대한주택공사 공정거래위원회 계소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참여연대 대장당)
2. 20~21 용인군 수지성원아파트 주민교육 - 아파트 주거문화와 공동체의식(심현철)

- 2. 27 아파트공동체연구소 2월 실행위원회
- 3. 11 경찰의 아파트 관리 비리조사에 대한 성명서 발표
- 3. 16 대한주택공사의 뉴하우징 관리체계 도입에 대한 내부간담회
- 3. 17 주공장기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내역 정보공개 촉구 집회
- 3. 20 아파트공동체연구소 상담상황실 회의
- 3. 23 주공임대아파트뉴하우징(주공에서 출자한 자회사) 관리체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2차 논의
- 4. 7 아파트 비리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참여연대 대강당)
- 4. 14~28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시민학교 개최
- 4. 22 주공장기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내역 비공개결정에 대해 시민단체주택공사, 주민대표로
구성된 '분양가 산정위원회'를 구성,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분양가를 산정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
- 4. 22 주공장기임대아파트 불법거주배상금(임대료, 관리비의 1.5배 인상) 징수에 대한 약관심사
재심청구
- 5. 8 아파트공동체연구소 상담상황실 회의
- 5. 21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송
- 6. 5 아파트공동체연구소 상담상황실 회의
- 6. 5 아파트공동체연구소 6월 실행위원회 개최
- 6. 12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지역시민단체 공동의견서 제출 예정
- 6. 19 아파트공동체연구소 상황실 회의 개최
- 7. 2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내부 간담회 개최(경실련 강당)
- 8. 12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공동주택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종로성당 3층)
- 8. 14 도시공동체운동의 이념 모색을 위한 이론분과 1차 모임 개최
- 8. 19 아파트공동체연구소 8월 실행위원회 개최
- 8. 28 소식지 창간 준비호 발간
- 8. 28~29 아파트공동체운동 공개 워크샵
- 9. 4 아파트공동체연구소 9월 실행위원회 개최
- 9. 9 도시공동체운동의 이념 모색을 위한 이론분과 2차 모임
- 9. 20 아파트 주민활동가 양성을 위한 공동체교육 개강 (11월 28일까지 총 8강)
- 10. 7~8 안양시청-아파트공동체연구소 공동 아파트학교 개최
- 9. 29 도시공동체운동의 이념 모색을 위한 이론분과 3차 모임
- 10. 13 아파트공동체연구소 활동전망에 대한 1차 논의
- 10. 18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 간담회 개최(의원회관 내 간담회장)
- 10. 20 임대주택관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국회도서관 지하강당)
- 10. 21 임대주택 주민 자치권 확보를 위한 집회 (국회 앞)
- 10. 29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 간담회(의원회관 내 간담회장)
- 11. 3 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한 주민서명운동 선포식 (중계동 목화아파트 관리사무소)
- 11. 6~7 아파트공동체연구소 활동전망에 대한 2차 논의
- 11. 8 아파트 주민활동가 양성을 위한 공동체교육 종강
- 11. 15~16 아파트시민학교 개최 (안양시 동안여성회관)
- 11. 24 도시공동체운동의 이념 모색을 위한 이론분과 4차 모임

- 11. 18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송
- 12. 6 아파트공동체연구소 12월 실행위원 회의
- 12. 6 아파트 주민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 후속모임
- 12. 8 도시공동체운동의 이념 모색을 위한 이론분과 5차 모임

< 의정감시센터 >

- 98.12.3~99.3.2 경제청문회 모니터
- 1. 6 국회 529호실 사건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서
- 1. 25 정치권 지역감정조장에 대한 논평
- 3. 9 서상목 방탄국회에 대한 논평
- 3. 10 국민과 함께 하는 국회 만들기 캠페인 돌입
- 3. 17 국회개혁 쟁점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발표
- 4. 8 재판출석 거부 의원 6명에 대한 항의서 전달
- 4. 13 시민로비단 월례모임 “정치개혁의 방향과 유권자의 역할” - 오유석 박사
- 4. 13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만들기 - 청렴성과 도덕성 관련 정보공개청구”
- 4. 20 사무처에서 공개한 잦은 상임위 변경에 대한 분석 결과 발표
- 4. 30 사무처에서 공개한 청원안·법률안 처리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 발표
- 5. 11 시민로비단 월례모임 “국회개혁의 방향과 유권자의 역할” - 손혁재 선생님
- 5. 11 “한나라당의 이미경의원 상임위 변경 결정에 대한 입장”
- 5. 21 “한나라당의 중앙당 불개입 번복에 대한 입장”
- 5. 18~ 6. 3 6.3재선거 감시활동
- 5. 26 “선거개혁 쟁점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7. 21 각 정당의 수입지출내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및 선관위에 질의서 발송
- 8. 10 “교육관계법 개악에 대한 논평”
- 9. 8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발족
- 9. 17 정책과제발표 기자회견 : 166대 중점과제 선정·발표, 각 의원실에 전달
- 9. 29~10. 18 국감 모니터, Best/Worst 질의 및 의원 선정 발표
- 10. 7 공익로비를 위한 유권자 교육 I : 손혁재선생님 (국회의 조직과 운영)
- 10. 14 공익로비를 위한 유권자 교육 II: 윤종훈 회계사(조세제도의 개혁방향)
- 10. 20 국감시민연대 1차 평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10. 21 공익로비를 위한 유권자 교육 III : 남규선 총무(국가보안법의 개혁방향)
- 11. 10 “민생·개혁법안 회기내 처리를 위한 시민로비 선포 기자회견”
- 11. 11 국감시민연대 평가토론회 및 해단식
- 11. 22~26 선관위-아태나워재단 주관 “민주시민지도자 교육” 연수
- 11. 25 “국회의원의 기득권 지키기 위한 여야 합의 철회해야”
- 11. 11~12 개혁법안 입법화를 위한 국회의원 서명 운동
- 11. 26 “21개 시민사회단체의 정치개혁의견서”
- 11. 27 개혁입법촉구 연대집회
- 12. 20 의정감시 99년 겨울호(통권 5호) 발간

< 맑은사회만들기본부 >

1. 21 감사원의 불합리한 예산 및 조직운영 사례 지적 “국민의 이름으로 감사원을 감사한다”
2. 10 “국민회의 특별검사제법안 철회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
3. 16 한국형 K1전차 관련 군납비리 발표 기자회견
3. 23 [내부고발의 논리] 발간 기념 토론회 - 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발전 과 의미
4. 30 보도자료 “서울시 공직자 내부고발자보호제도 법제화 찬성”
5. 28~6. 7 김태정법무장관 해임 및 총체적 국정개혁 촉구 시민사회단체 연대활동
6. 14. 부방법·특검제 도입 공개질의 -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국민회의, 법사위
6. 16 (논평) “여권의 특검제 수용, 그러나 길길은 멀다-상설적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로 가야”
- 6월말~7월초 특별검사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국민행동
7. 23 철도청 내부고발자 증징계 관련 행자부 소청심사(어상희변호사 참석)
7. 29 (논평) “경기은행 수사, 용두사미로 끝나는가?” - 최시장에 대한 검찰수사, 짜맞추기 축소 의혹
8. 9 김현철씨의 사면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8. 17 (논평) “정부의 부패방지종합대책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8. 18 (논평) “김총리 떡값 2억5천만원 자금 출처 의혹, 투명하게 규명해야”
8. 19 보도자료 “국방부 중형수송기 사업, 3500만불 예산낭비인가?
- 참여연대, 인도네시아산 CN-235기약 전면취소 질의서 발송”
8. 20 인도네시아 부패감사 민간기구인 ‘Indonesian Corruption Watch’에 사업추진 문제점 관련 개요 및 언론보도 기사 송부
9. 2 (논평) “수사권없는 국회청문회 한계 드러내 - 특검제 통해 진상규명, 위증자 처벌해야”
9. 9 철도청 공익제보자 징계처분철회소송 제기 및 참여연대 공동변호인단 발족 기자회견
9. 15 국정감사 국방위 모니터 관련 정책과제 마련 제출
9. 16 경문대학 재단 비리 관련 서울지방검찰청에 수사촉구서
9. 29 대구산업정보대학 비리 의혹 주장 관련 자료 대구지검에 발송
9. 29 국방위 국감 방청불허에 국방위원장에 ‘항의서한’ 전달
10. 4 국방위 국감 방청불허 국방부 앞 규탄집회
10. 29 기무사 병역비리 관련, 대통령에 질의서 발송과 국방부장관 면담요청
11. 11 회원모임 ‘긱지사’ 서울시장 등 정부 각 기관장 관공비 공개요구 서울역 집회
11. 16 긱지사 서울시 각 구청 외유관련 정보공개청구 결과 평가 설명회
11. 19 (논평) ‘아웃리비 축소·은폐 의혹 반드시 규명돼야’
11. 20 충주호 불법 투기 및 공금 유용·횡령의혹 제보 관련 자료 청주 지검에 송부
11. 20 시립수서청소년수련원 위탁자 공금 횡령 의혹 서울시에 ‘시민감사’ 청구
11. 23 기무사 병역비리관련 고석 검찰부장 공무상 비밀누설 및 명예훼손죄로 고발
11. 24~25 국가투명성확보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대토론회
11. 30 정부의 반부패정책 평가 및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서 발송
12. 1 예산 및 재정관련 부처인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행자부에 관공비 관련 정보공개청구
12. 9 “개혁통신”쓴소리, ‘대통령님, 병역비리를 은폐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십시오’, “미완의 부패방지법- ‘반부패기본법’(여당안)으로는 부패척결도, 국정개혁도 불가능합니다” 게재
12. 28 (논평) 부패방지법 제정 논란에 따른 ‘부패방지법, 이대로는 안된다’
12. 29 (논평) 국방부 병무비리 ‘감사결과’에 관련, ‘기무사를 위한 면죄부 감사결과 발표’

< 사법감시센터 >

- 1월
- 논평.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법조비리
 - 논평. 대검의 직접수사와 관계자 명단공개를 촉구한다
 - 논평.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연대 시민고발창구 개설
 - 논평. 대전지검의 수사팀을 교체하라
 - 논평. 연이은 법조비리에 대한 검찰총장의 책임
 - 논평. 전관예우금지,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한다
 - 법무부장관의 전관예우금지 입법반대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논평.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은 경찰, 누구를 구속할 수 있을까
 - 금품 향응 판검사 엄중 처리하여야
 - 논평. 수뢰·향응 검사명단, 엑수 전면 공개하라
 - 논평.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연대 시민고발창구 개설
- 2월
- 논평. 대전이종기변호사사건 수사결과 발표,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 논평. 박상천장관과 김태정총장 퇴진 없이 검찰개혁 없다
 - 논평. 개혁을 위한 용기: 문홍수판사의 법원개혁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 논평. 조직안정을 위해 개혁을 포기한 검찰의 소폭인사
 - 검찰개혁의견서 발표, 대검찰청 접수
 - 사법개혁대토론회, 검찰·법원개혁 및 법조교육양성제도에 대하여
 - 변호사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정리를 위한 내부간담회
- 3월
- 공청회. 변호사법개정에 관한 긴급 공청회
 - 변호사법 개정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발표
 - 「사법감사」 11호 발간
- 4월
- 보도자료. 정치권은 정녕 치외법권지대인가
 - 불구속 정치인의 재판 불출석에 대하여 각 국회의원 담당재판부와 국회의원에 질의서한 및 항의서한 발송
 - 긴급토론회. 사법비리 보도에 대한 검사들의 명예훼손
 - 소송제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 보도자료. 공직자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언론자유 제약할 수 없다
- 5월
- 논평.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정부 사법개혁위원회
 - 동부지청 박충근검사 성추행사건 항의를 위한
 - 동부지청 김승년차장검사 항의방문
 - 동부지청 박충근검사 성추행사건 항의를 위한 검찰총장 면담
 - 수원지법 형사제1부 장상익판사에게 증인에 대한 비인격적 태도를 항의하는 질의서 발송
- 논평. 검사가 성추행이라니: 정신 못차린 검찰,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 논평. 대통령에 의해 사문화된 검찰총장 임기제
-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추진위에 대한 입장정리를 위한 내부간담회
- 동부지청 박충근검사의 대한매일여기자 성추행 사건을
- 대응하기 위한 연대활동 .여성의 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 여성민우회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 6월 논평. 국민의 정부에서 이럴 수가: 공안검찰의 노조파괴공작 의혹,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단체연대회의 구성 논의
 논평. 김태정장관 경질,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
 보도자료, '바람직한 특검제 방안을 생각하는 모임'
 논평, 검찰의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에 대한 논평
 「사법감시」 12호 발간
 정보공개청구
 -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 의제, 일정, 회의록 청구
 - 기획예산처: 98년에 실시된 법무부 경영진단 및 평가자료
- 7월 '사법개혁 과제' 선정을 위한 간담회(1차)
 '사법개혁 과제' 선정을 위한 간담회(2차)
 논평, 검찰의 특검제 반박 논리와 그 허구성
 논평, 검찰의 조직적 개입 은폐한 보여주기식 정치쇼(진형구 전공안부장 구속)
- 8월 '김현철씨 사면불가·준법서약제 폐지' 관련 공개서한, 대통령 앞 발송
 사법개혁연대회의 1차토론회, '법조인양성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논평, 국민의 대법원장 후보추천은 국민주권의 실현
- 9월 시민예비청문회, 참여연대가 바라는 대법원장
 논평, 최종영대법원장, 최선의 인사를 외면한 소극적 인사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중간시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법조인양성제도 개혁안 마련을 위한 1차 연대회의
 국회기자실, 이종남감사원장 임명동의 국회 부표촉구 긴급기자회견
 법조인양성제도 개혁안 마련을 위한 2차 연대회의
 국회임명동의권의 신중한 행사를 요구합니다(대법관 지명에 관한 요망사항)
 대법관에 대한 국회임명동의권의 신중한 행사촉구 항의서한 발송
- 10월 서울고·지검 모니터
 법제처 모니터
 법제처 모니터 결과 보고
- 11월 논평, 무엇을 위한 특별검사였다.(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정원제 사법시험의 위헌소송 제기를 위한 공개토론회
 논평, 법사위의 변호사법 개악시도를 반대한다.
 논평, 시대착오적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법조인 양성제도안
- 12월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사법개혁안에 대한 반박 토론회
- 12월 논평, 국민의혹 해소에 기여한 최병모 특검팀
 논평, 대통령 송년특별담화는 사면권 남용
- 12월 위헌소송, 사법시험 정원제 위헌이다.

● 시민사업국

1. 회원사업 현황

1. 총 회원수

- 6214명 (1999년 12월31일 현재)
- 7250명 (2000년 1월 31일 현재)
- ☞ 신입회원 희망자 : 매월 평균 300여명, 2000년 1월 1천명으로 늘어

2. 자원활동가 현황

- 99년 교육수료 124명

3. 회원자치모임 현황

1) 세대별 모임

내일을여는청년마을 / 그들의어머니회 / 숙년회 / 대학생모임 참깨

2) 실천 모임

시민로비단 / 나라곳간을지키는사람들 / 작은권리를지키는사람들
통일일꾼모임 / 열린사회를만드는사람들의모임

3) 취미모임

등산모임 산사랑(장년) / 등산모임 뒤편(청년) / 답사모임 우리땅
노래모임 참종다 / 축구모임 휘나리 / 풍물패 막사발

4. 회원활동 정례화

- 1) 신입회원한마당 : 매월 두 번째 수요일 저녁, 사업설명 및 회원참여 안내
- 2) 자원활동교육 : 매월 1,2,3주 화요일 저녁, 자원활동에 필요한 기본교육 실시
- 3) 여름캠프 : 온가족이 함께 하는 회원캠프로 자리잡아 나감
- 4) 회원대동제 : 9월 창립기념일을 자축하는 회원한마당

5. 회원통신 '아름다운사람들' 매월 발행

6. 수익사업

- 모자, 가방, 티셔츠 등 참여연대 캐릭터상품 판매

II. 2000년 사업계획

1. 사업 목표

- 1) 회원참여의 다원화, 체계화
- 2) 참여연대 회원 2만시대 개척
- 3) 지역운동과의 새로운 관계모색

2. 회원참여의 다원화, 체계화

- 1) 참여연대 회원의 소속감 형성에 주력
 - ① 참여연대활동 관련정보, 문화정보, 생활정보, 할인혜택 등 실질적 서비스 제공
 - ② 참여프로그램 (153, 자치모임, 캠페인단) 교육프로그램 강화
 - ③ '2001' 회원수첩 제작
- 2) 의사수렴, 쌍방향 의사소통 구조 강화
 - 회원통신, 홈페이지, 기타 주기적 의사수렴, 연락구조 확보
- 3) 조건에 맞는 회원모임 강화
 - ① 기존회원모임 활성화 지원 및 참여연대 활동과의 연관성 강화
 - ② 지역회원모임 실험 - 활동의지가 있는 지역회원 대상 정기적 교육/ 활동자료 제공
 - ③ 직능별 모임 확대 추진
- 4) 자원활동 강화
 - ① 참여연대의 모든 업무를 분석, 수천가지의 자원활동매뉴얼로 정리
 - ②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 - 시민운동에 대한 이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 ③ 선물, 증서, 메달, 감사패 수여 등의 크고 작은 의례 개발
 - ④ 상근진, 자원활동 상호간의 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 5) 회원활동의 체계성, 일관성 제고
 - 신입회원교육→자원활동교육→회원모임참여, 활동프로그램 참여
 - 참여연대의사결정구조 참여 등의 회원참여활동시스템 마련

3. 2만 회원시대 개척

- 1) 홍보사업의 강화
 - 차별화된 이미지 형성, 회원확대로 이어지는 홍보전략 수립
- 2) 타겟별 접근방식 개발
 -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한 기획이벤트,안내문발송,전화작업 등 진행
- 3) 현장출동 강화

- 일상적 가두회원확대캠페인, 지역강연회 등 개최
- 4) 회원주체 회원확대 캠페인

4. 지역운동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

- 1) 기존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활동의 반성
 - ① 지역운동연대 97년 출범 이후 활동력 및 연대의 질 저하
 - ② 참여연대의 지역 이슈에 대한 이해, 정책역량 부족 등의 문제해결
- 2) 지역단체의 책임성 제고와 연대의 질 높이기
 - ① 전국적 사안과 지역운동적 사안을 분리하여 대응방식을 다르게 가져감
 - ② 지역단체가 간사단체를 맡고, 참여연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 ③ '참여자치'를 지향하는 단체들의 참여 확대

● 문화사업국

· 2000년 사업계획

1. 홍보역량 강화

· 문화사업에 관심을 가진 전문위원과 홍보위원회, 홍보전략회의 등 홍보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구성이 요구됨

- 1) 홍보자문위원 확보(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성)
- 2) 홍보전략회의 신설(매주1회 - 사무국장,문화사업국장,시민사업국장)
- 3) 홍보사절단 구성(각종 인터뷰, 토론자 요청에 대응 할 수 있는 틀 마련)
- 4) 퍼포먼스팀 구성
(각종 이슈를 시민들과 공유, 매체에서 능동적으로 찾아오는 발판을 마련- 2월부터)

2. 홍보사업

- 1) 다양한 홍보물 제작(회원 타켓별 인쇄홍보물, 애니메이션, 영상물 등)
- 2) 참여연대 History Capsule Room 마련(참여연대 사료구축)

3. 다양한 기획사업 전개

- 1) 영상사업단 발족(3월 중순 경 발족)
 - ① 참여연대의 활동상 뿐만 아니라, 시민이 참여로 만들어지는 틀 마련
 - ② 참여 퍼블릭 액세스 전담팀 구성
- 2) 음반사업추진(구체적인 제작, 배포 시점은 6주년 행사 전후로)
 - 강연테이프, 고정적인 팬들이 확보된 가수
- 3) 참여투어 프로그램 운영
 - ① 참여투어 전담팀 구성(시민사업국, 사무국, 자원활동가 - 1월 15일부터)
 - ② 투어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다양한 홍보대책 및 투어시나리오작업완료 - 3월부터)
 - ③ 투어프로그램 가동(4월부터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
- 4) 느티나무 공간 상설 문화프로그램 운영

- ① 공연(대중적인 예술가보다는 창의적이고 신선한 젊은 층을 흡수)
- ② 전시(평면적인 전시기획 탈피, 장르의 다양성 추구)
- ③ 사업 전개(참여연대 CIP 베이스를 토대로 다양한 캐릭터 개발 - 시민사업국 공동)

- 5)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 기획
 - 투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수렴(다양한 문화축제 기획)
- 6) 창립6주년 행사
 - 영상, 음반 사업과 함께 대형이벤트추진

4. 아름다운 재단 설립

- 1) 조직구성 (2월)
 - ① 컨설팅본부 구성
 - ② 사무국 인원구성
- 2) 분위기 조성(3월 - 4월)
 - ① 기부문화 혁신을 위한 공익기부운동 전개
 - ② 각종 홍보물과 매체활용
 - ③ 강연, 교육을 통한 홍보
- 3) 확산(5월부터) 동아일보 공동 캠페인 전개
- 4) 본격적인 모금운동전개
- 5) 설립

• 의정감시센터

I. 1999년 사업보고

1. 시민로비단

- 1) 월례모임 및 회원교육 7회 개최
- 2) 국민과함께하는 국회만들기 캠페인
- 3) 6개 민생개혁 법안 입법화를 위한 국회의원 서명운동

2. 의정감시 뉴스레터 발행 : 4호, 5호 발행

3. 경제청문회 모니터 (98.12.8 ~ 99.2.24)

- 1) 일일 모니터 보고서 총 14호 발행
- 2) 경제청문회 시민보고 보고서 발간
- 3) 경제청문회 평가보고서 발행 (99.3.4)

4. 국민과 함께 하는 국회 만들기

- 1) 3.10 투명성과 접근성 관련 9개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2) 3.25 전문성과 충실성 관련 9개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3) 4.13 청렴성과 도덕성 관련 15개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4) 4.20 정보공개 자료 분석결과① : 잦은 상임위변경, 의정활동 부실화의 원인
- 5) 4.30 정보공개 자료 분석결과② : 먼지 쌓여가는 입법청원, 국민 참정권 침해

5. 6.3재선거 감시활동

- 1) 참여연대-경실련-한겨레신문 6.3 재선거 현장 감시활동
- 2) 선거 기간 중 선거감시 결과 한겨레신문 연재
- 3) 6.2 선거감시 평가좌담회

6. 국고보조금 운용 실태 조사

- 1) 각 정당의 수입·지출내역 3차례 열람 결과, 지출 증빙서류 부실 판명
- 2) 7.21 감사원에 감사청구 및 선관위에 질의서 발송

7. '99 국정감사 모니터 (9.8 ~ 11.11)

- 1) 9.8 국감시민연대 발족식 : 국회 헌정기념관, 40개단체 참가
- 2) 9.17 166대 중점과제 선정·발표, 각 의원실에 전달
 - 3) 9.29~10.18 국감 모니터, the Best/the Worst 질의 및 의원 선정 발표
- 4) 14개의 모니터 대상 상임위중 9개의 상임위 방청거부
- 5) 11.11 국감시민연대 평가토론회 및 해단식

II. 2000년 사업계획

1. 사업기초

- 1) 2000년 총선 낙선운동 전개 : 무능부패 정치인 유권자 심판운동
- 2) 16대 국회 모니터 체계구축 : 의정자료실을 담은 홈페이지 운영
- 3) 정기적인 의정활동 평가

2. 주요사업

- 1) 무능부패 정치인 낙선운동
 - ①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
 - ② 자료조사 및 홈페이지 DB 작업
 - ③ 15대 국회의원 및 16대 총선 후보에 대한 자료조사
- 2) 국민과 함께 하는 국회만들기 유권자 행동
 - ① 16대 국회에서 실현해야 할 100대 개혁과제
 - ② 국민과 함께 하는 국회만들기 유권자 한마당 개최
 - ③ 유권자 행동 매뉴얼
- 3) 국정감사 모니터
 - ① 정책감사를 위한 유권자 행동
 - ② 의원 및 피감기관에 대한 종합적 평가
- 4) 연구기획 사업
 - ① 체계적인 의정활동 평가 방식
 - ② 제도개혁 방안 마련
 - ③ 정치관계법에 대한 입법청원운동
- 5) 의정감시센터 홈페이지 운영
 - ① 16대 국회의원 자료실
 - ② 국회,정당,선거 제도개혁 과제 및 모니터 결과 공개
 - ③ Cyber 유권자 행동 조직
- 6) 월간 의정감시 발간
 - ① 실행위원회 산하에 의정감시지 편집위원회 구성
 - ② 지면을 축소하고 월간화
 - ③ 홈페이지 적극 활용

● 사법감시센터

I. 1999년 사업보고

1. 일상 업무의 불안정

- 1) 법조인 자료실, 사법감시자 발간 등 일상적 모니터 사업의 부실
- 2) 실행위원회 기능 무력
- 3) 기획과 이슈 파이팅의 적절한 결합이 이뤄지지 않음

2. 시민참여 사업의 부재

- 회원모임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이 부족함

3. 인력과 재정의 부족

- 1) 업무에 비해 가용인력 부족
- 2) 열악한 재정 상황

II. 2000년 사업계획

1. 사업 목표

- 1) 시민의 사법주권 회복 및 시민생활에 불편을 안겨주는 사법제도의 개혁 압력
- 2) 일상업무의 안정화
- 3)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개선

2. 주요사업계획

- 1) 시민의 사법주권 회복

① 그림자 배심원단

- 국민주권의 원리를 재판내용에도 관철, 장기적으로 배심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및 실험
- 특정(유명) 형사사건에 관한 배심원단 공개모집 → 방청과 자료검토 후 판결일에 판결선고와 동시에 유무죄를 평결하고 이를 공개
- 시민사법위원회구성, 토론회 등 지속적 계몽작업,
- “배심제란 무엇인가” 등에 대한 논저, 안내책자 발간,

- ②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활성화
 - 법원, 검찰, 각종 사법제도위원회에 시민참여 주장
 - 사법개혁과 관련된 영화제 개최
 - 모의 법정, 사이버 법정
- 2)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안겨주는 사법제도의 개선
 - ① 시민의 눈높이로 사법시스템 개선
 - 사법 매뉴얼 제작·보급, 사법시민현장 제작
 - 등기, 경매 제도 개선
 - 소송절차에 통합적 안내 시스템 도입 : 시민들의 이용편의와 법원공무원의 불친절 시정
 - ② 시민모임의 재건
 -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진 회원 모집
 - 좋은 판결한 판결사에게 격려서한 보내기, 사법개혁 디딤돌상 선정 등
- 3) 일상업무 안정화
 - ① 법조인 자료실
 - 파일변경 및 자료 업데이트
 - 공소장, 판결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운동
 - 업무제휴를 통한 인력, 비용 절감
 - ② 사법감시지 정기화
 - 정기적 발간으로 유료독자 및 재정확보
 - 편집위원회 구성 : 기획, 기고, 정보제공
 - 발송방법 개선 : 이메일 발송 병행
 - ③ 실행위원회 강화
 - 직역확대 : 변호사, 사무장, 법조출입 기자, 일반시민
 - 사업에 대한 역할 분담으로 적극적 참여방안 모색
- 4) 기타
 - ① 전관예우 실태조사
 - 형량, 인신구속 등에 대해 국선변호인가 비교조사
 - ②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
 - 특검제 상설화

● 맑은사회만들기본부

I. 1999년 사업보고

1. 부패방지법제정운동의 전국민적 이슈화와 1기 반부패캠페인 마무리

- 1) '옷로비 사건' 등 전국사회단체 연대투쟁에 부패방지법제정운동을 적극 결합
- 2) 여·야당으로 하여금 지난해 12월 '반부패기본법' 을 각각 국회에 입법 상정토록 이끔.
- 3) 그러나 본 법안에는 내부고발자보호제도 이외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공직자윤리법, 돈세탁금지법 등이 모두 제외돼 후속작업 필요.

2. 공익제보지원운동 강화

- 1) 철도청 공익제보자 파면 공익소송, 상지대 양심선언, 기무사병역비리수사 축소·은폐 의혹, 병역비리 의혹 관련 군 검찰부장 고발, 서울수서청소년수련관위탁운영 비자금 조성 의혹 시민감사청구 등 활성화
- 2) 공익소송 변호인단 확충 등 인적자원 미확보로 인한 사업진행 어려움.

II. 2000년 사업계획

1. 2000년 사업목표

- 1) 민간부패까지도 포함하는 시민참여형 제2기 반부패 캠페인 전개
- 2) 부패방지법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작업과 함께 부패사범사회복귀방지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2차부패방지법' 제정운동

2. 주요 사업계획

- 1) 반부패캠페인 사업계획
 - ① 반부패 캠페인 실천조직 '옴부즈만단' 운영
 - 공익제보지원단 산하 각 분야별 지원단 구성, 한달에 한번 제보하기 등
 - ② 반부패 캠페인 기금 '그린펀드' 조성
 - 정의와 양심의 호루라기들에게 작은 선물, 보상을
 - 중소기업 상대로 DM, 일간신문, 방송 등 광고운동
- 2) 정책사업단 사업계획
 - ① 부패지수개발
 - 부패지수 매년 발표

- 여론조사
 - ② 부패기업블랙리스트 매년 발표
 - 지난 5년간 부패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 리스트 작성 등
 - ③ 부패방지종합대책 마련
 - 부패방지종합대책 및 운동요강 마련 : 현행 전반적인 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참여연대의 운동방침 제시
 - 반부패기본법 제정에 대한 후속 작업 :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강령, 돈세탁금지법 제정 등
 - 2차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 부패사범사회복지방지법
 - 부패방지 100대 과제 선정
 - ④ 민간부패(경제비리) 척결을 위한 사업
 - Integrity Pact 운동 : 정부 납품 및 공공공사 계약과정에서 정부 및 용찰 기업사이의 신사협정 맺기. 뇌물을 주고 받지 않겠다는 조항을 반드시 삽입, 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불수, 보증금 몰수, 경쟁회사 및 발주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입찰참가자격 박탈 등
 - 한국기업의 외국에서의 부패행위 & OECD 반부패 조약을 통한 운동
 - : 2000년 5월 한국정부의 Report 및 조사결과 발표 → Counter Report 준비
 - 전문가 책임에 관한 법률
 - ⑤ 프로젝트 사업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프로젝트 : 4월경 독일 관계자(에버트재단 추천) 초청, 독일과 유럽의 사례. 6월경 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 관계자 초청, 아시아의 사례
 - UNDP 프로젝트
- 3) 공익제보지원단 사업계획
- ① 제보접수 및 고발기능 강화
 - 소송 변호인단 확충 및 병역비리 전담창구 마련
 - ② '시민옴부즈만단' 구성
 - 시민권익옹호하는 자위조직-시민 있는 시민운동 조직화
 - 병역비리 옴부즈만단, 보건의료비리 옴부즈만단(회원사업국과 공동 추진)
 - 한달에 한번 제보하기, 공공기관의 화장실 등에 제보지원스티커 부착 등
 - ③ 비리제보 자문위원 영입 및 활동
 - ④ 공익제보자의 날 지정
 - ⑤ 공익제보 매뉴얼 뉴비전 발행

● 남세자운동본부(가칭)

☞ 남세자운동본부는 신설을 희망하는 부서로서, 총회 결의를 얻어 현재의 조세팀과 정보공개사업단을 통합하여 남세자운동본부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정보공개사업단과 조세팀 각각의 사업계획입니다.

▣ 정보공개사업단

I. 1999년 사업보고

1. 성과

1) 실행위원회

- 기존의 변호사 인력외에 정보공개법 전공 교수(서울시립대 경건 교수), 기록물관리학 전공 교수(국가기록물관리원 김익한 교수), 시립연구기관 연구원이 참여하여 인력풀이 좀더 다양해지고, 구성원들의 안정감이 더해졌음.

2) 사업

- ① 1주년 기념토론회와 '국가투명성 확보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대토론회'를 통해 정보공개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 왔음. 또한 정보공개제도의 기본전제가 되는 기록물관리제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그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은 새로운 영역의 개척가능성을 보여주었음.
- ② 서울시장 판공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제기와 지속적인 압력, 낫지사 회원들의 집회 등을 통해 서울시장이 1999. 11. 25. 일부공개발표를 하게끔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그리고 참여연대의 선도적인 활동에 의해 판공비 공개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도 성과로 볼 수 있음.
- ③ 1999년 5월에 실시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조사는 정보공개법 시행이후에 최초로 시민단체에 의해 이루어진 실태조사로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음. 이러한 실태조사 활동 등을 통해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도 서서히 개선되고 있음.
- ④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정보공개운동을 다루는 유일한 활동단위로서 참여사회 아카데미 교육과 타 단체요청 교육을 통해 정보공개운동의 확산을 위한 활동을 벌였음.

2. 한계

- 1) 담당간사의 휴직 등으로 인해 활동력이 떨어지는 등 조직의 지속적인 활동력에 문제가 있었음. 또한 실행위원간에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대외적 활동

이나 정책활동이 일부 실행위원에게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 2) 참여사회 아카데미 교육이 1회로 그치는 등 정보공개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벌이지는 못하였음. 특히 체계적인 교육커리큘럼의 부재, 축적된 경험의 부족 등으로 인해 충실한 교육내용을 만들지 못하였음.

II. 2000년 사업계획

1. 사업목표

그동안 정보공개사업단의 활동결과, 정보공개청구제도의 이용이 각 지역단체로 확산되는 등 일정정도 운동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1998년과 1999년 운동의 성과를 모아 2000년에는 정보공개운동의 심화확산을 추진.

2. 사업계획

1) 판공비 공개운동

① 서울시 소송계속 진행

- 서울시의 공개범위가 당초 참여연대에서 청구한 범위에 미치지 못하므로 소송은 계속 유지해야 할 것임. 그리고 소송에서 판결이 나오는 시점에 서울시에 대해 재차 공개요구를 할 필요가 있음.

②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판공비 정보공개청구 및 소송제기

- 중앙부처중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부서 몇개(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부분공개결정을 하였으나, 행정자치부는 비공개를 하였음. 행정자치부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고,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부분공개한 정보를 열람한 이후에, 공개범위와 공개수준을 검토하여 소송제기여부를 결정할 것임.

③ '전국 판공비 공개운동 네트워크(가칭)' 조직

- 현재 제주,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인천 등지에서 지역단체에 의해 산발적으로 판공비 공개운동이 벌어지고 있음. 그러한 운동의 성과를 모아 전국단위의 네트워크를 조직할 예정임(2월하순 또는 3월 초순경). 네트워크 구성후 판공비 공개에 대한 압력수준을 높이고, 범정부차원에서 '판공비 공개지침' 및 '판공비 집행지침'을 제정하도록 요구할 예정임.

④ 판공비 문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

- 각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판공비 운동의 사례와 성과를 점검하고, 범정부차원에서의 제도개선 대안('판공비 공개지침'과 '판공비 집행지침', 정보공개법 개정 및 예산부정방지특별법 제정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네트워크 출범과 함께 개최할 예정임.

- 2) 입법 및 제도개선 운동
 - 그동안 정보공개법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 개정운동과 기록물관리시스템 정비 및 법개정운동을 벌여 나갈 예정임.
- 3) 정보공개 및 기록물관리 실태조사
 - 5월경에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정보공개 및 기록물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4) 기획 정보공개청구
 - 국가가 추진한 중요한 정책에 대한 사후평가.점검을 위해 정책입안관련 서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기획하고 있음. 첫사업으로 (1)기획예산처가 주도한 정부개혁 작업과 (2) 1999년에 서울시가 추진한 중요사업에 대한 정책입안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임.
- 5) 교육. 출판 사업
 - ① 정보공개소송매뉴얼북의 출간 검토
 - ② '정보공개 길라잡이' 개정판 출간예정.
 - ③ 참여연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정보공개와 관련한 상담을 접수하고, 정보공개청구 제보창구(공무원의 접수거부, 통지시한 위반 등)를 마련하며, 정보공개사업단의 활동에 대해 홍보할 예정임.
- 6) 조직계획
 - ① 현재의 실행위원진을 대폭 확충할 필요 있음.
 - ② 변호사의 경우에는 정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 외에 단 1건의 정보공개소송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변호사인력풀로 '정보공개를 지원하는 변호사단'의 구성 시도 예정.
 - ③ 정보공개제도와 기록물관리제도 실태조사를 위한 대학생 자원봉사단 모집·구성.

■ 조세팀

I. 1999년 사업보고

1. '절반의 성공'으로 요약되는 조세팀의 1년

- 1) 현재 변호사 2인, 회계사 2인, 세무사 2인으로 구성된 실행위원진의 보강과 전담간사의 배치로 인력의 안정성 확보
- 2) 경제민주화위원회로부터 독립하면서 회원을 독자적으로 관리하게 되었고, 동아일보와의 기획연계 프로젝트 등을 통해 재정의 안정성 확보
- 3) 국민연금 확대실시를 계기로 자영자 소득과약의 중요성이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었고, 정부와 대통령의 세계개혁의지가 강하게 표명되면서 운동의 사회적 여건이 호전

- 4) 1999년 3월 발표한 세제·세정 10대 개혁과제 중 6개의 과제를 실현시킴
 - ① 금융소득종합과세가 2001년부터 재실시되게 되었고,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 및 간이과세제도 상한기준이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으로 확정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투명성'의 기초를 확립하게 됨.
 - ② 이외에도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실시, 세무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 표준소득률 산출근거자료 등에 대한 조세정보공개청구운동, 재벌의 변칙·증여상속을 막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이루어짐
- 5) 시민단체간의, 노동운동과의 연대활동의 폭을 넓힘
 - ① 조세개혁이 정치권이나 정부에 의해 흔들릴 때마다, 경실련과 민변, 건강연대, 여연 등 다른 시민단체들과 공동기자회견, 공동성명서의 발표 등의 연대활동을 진행
 - ② 뿐만 아니라, 금융노련, 사무금융노련, 언론노련과 1년여 기간 동안 조세개혁을 위한 공동거리캠페인, 서명운동, 공동의견청원 제출 등 지속적인 연대사업을 벌임

2. 1999년에 대한 평가와 반성 : '기획력의 부족'과 '정치력의 한계'

- 1) 지난 1999년 조세팀이 괄목할만한 성과와 성장을 거뒀음에도 '절반의 성공'만을 이루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기획력의 부족'과 '정치력의 한계'로 요약된다.
- 2)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 등 중요한 제도개혁을 이뤄냈지만, 년초에 1년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기획이 부족했기 때문에 몇몇 특정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놓쳐 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 3) 또한, 1년 동안의 조세개혁운동의 성과가 정기국회를 거치면서 변질·왜곡되는 상황을 확실히 막아내지 못한 것은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충분한 '정치력'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로 판단된다.

II. 2000년 사업계획

1. 위상의 변화

- 납세자운동본부가 신설되면 실행단위로 배치

2. 조세개혁의 21세기 장기과제

- 1) 조세부담의 형평성 실현
 - ①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간의 세부담 형평
 - ② 변칙적 부의 세습근절
- 2) 세제·세정의 투명성 확보

- ① 과세인프라 구축을 통한 거래투명성
- ② 조세체계의 단순화와 명료화
- 3)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
- 4) 사회적 연대를 가능케 하는 적절한 세부담

3. 2000년 사업계획

- 1) 입법 및 제도개선 운동
 - 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상한기준의 법제화
 - ②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및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전환 등 주식시장 과세방안
 - ③ 표준소득률의 폐지
 - ④ 영수증제도의 개선
- 2) 교육 및 출판 사업
 - ① 납세자 권리찾기 매뉴얼북의 제작
 - ② 초/중등 교과서에 '납세자 권리'관련내용 삽입
 - ③ 직장인을 비롯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 교육 확대
- 3) 기획사업
 - ① 기획 정보공개청구 : 조세관련 주요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 ② 기획 토론회 : '외국의 조세개혁운동' 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
 - ③ 기획 연재 : 납세자 권리, 영수증 제도 등 주요 사안을 신문에 연재
- 4) 조세개혁팀 홈페이지의 적극적인 활용
 - ① 자료 및 개인, 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
 - ② 인터넷을 통한 회원확대

●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I. 1999년 사업보고

1. 사업

1) 일상사업

- ① 부분적으로 진행되던 상담사업의 본격화, 전면화
- ② 상담 및 구제활동을 통한 시민인지도, 신뢰도 및 접촉면의 제고
- ③ 민원의 양적 증가에 따른 과부하와 역량의 한계, '운동적 의미와 성과'의 한계 노정
- ④ 상담 중심의 일상사업부문의 효율화 및 기획사업 중심체제로 전환하는 과제

2) 기획사업

- ① 지하철행지연 소송 승소, 검찰 동향과약 소송 승소, 전과사용료 폐지 등 대중적 관심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의 성과와 사례 추적
- ② 상담-피해구제 중심의 활동을 넘어 본격적인 기획사업 중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내외적 기반 형성
- ③ 지나치게 다양한 사안의 접근에 따른 비관련다각화, 사업의 비체계성 및 일회성 노정
- ④ 지속적인 전문성을 축적하지 못하는 소송중심의 단편적 사업형태의 문제점

2. 조직

1) 전문가

- ① 본부장(김철준변호사)외 실행위원 7인
- ② 논의력, 책임성, 집행력 제고, 실행위원회 안정화 추세.
- ③ 실행위원 확대 및 법률가만이 아닌 다양한 직역으로의 전문성 확대 필요

2) 자원활동가

- ① 일상사업에 기반한 자원활동 층의 확대
- ② 다양한 자원활동 참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체계화 과제

3) 회원

- ① 일상사업 및 기획사업 성과에 기반한 회원참여 확대
- ② 회원확대 및 참여의 내실화의 과제

II. 2000년 사업계획

1. 사업목표

0 1) 시민 실생활의 문제를 포괄하고 해결하는 생활 속의 시민운동의 전개

- 2) 피해구제 활동이 아닌, 법제도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 공익운동으로의 발전
- 3) 집단소송법의 제정, 법률구조제도의 개선 등 시민사회의 공익인프라의 구축
- 4) 자원활동의 활성화, 체계화를 통한 참여적 시민운동 구현

2. 주요사업계획

1) 공익법제 입법운동

① 개요

- 집단소송제, 법률구조제도, 민간단체지원제도 등 시민사회의 공익관련 법제도 개선
- 사업단위 구성 및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사업을 통한 입법운동 전개

② 사업계획

- 참여연대 공익법제팀(공익소송클리닉) 구성
- 집단소송법 등 관련 법제 입법안 성안 및 입법운동 추진
- 국내외 공익소송사례 연구·출판
- 공익제도 관련 워크숍, 토론회 개최

2) 작은권리 100대 기획사업 추진

① 취지

- 시민 생활속에 산재하는 낡은 제도, 관행, 현실을 해결하는 시민운동 전개
- 상담-피해구제 중심의 운동을 넘어 종합적인 공익운동으로의 발전 모색

② 사업분야(작은권리찾기 5대사업분야)

- 행정 및 공공서비스분야
- 생활환경 및 시민안전 분야
- 금융 및 조세분야
- 사법 및 인권분야
- 기타 공익분야

③ 사업계획

- 각 분야별 개선과제 및 사업계획 도출
- 작은권리찾기운동 사업설명회 개최(3월)
- 단기, 중장기 계획에 따른 기획사업 추진
 - 기획소송, 사회조사, 모니터, 입법운동, 시민행동등 다양한 사업방 식의 전개
- 연말 사업평가회 및 보고서 발간(12월)

3) 작은권리 1인 1제안 캠페인

① 취지

- 시민생활속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현실을 사업과제로 유도
- 회원, 시민과 함께 하는 '작은권리찾기운동' 전개

② 사업계획

- '작은권리찾기 1인 1제안' 연중 캠페인 전개
- 참여연대 홈페이지내 '1인 1제안운동' 사이트 개설
- 매월 '이 달의 제안' 선정, 발표 및 시상
- 제안주체의 사업참여 유도

4) 자원활동 및 시민참여

- ① 시민·회원 대상 '작은권리지킴이단' 모집, 확대
- ② 자원활동가 중심의 '작은권리 모니터그룹' 조직 등
- ③ 공익을 위한 '시민감시 및 시민행동'의 역할

● 아파트공동체연구소

I. 1999년 사업보고

1. 조직적인 측면

- 1) 회원관리 : 회원관리부재. 증가율도 담보상태 / 회비납부율 저조
- 2) 실행위원 : 회의체계 불안정. 사업기획과 집행에 대한 책임성이 떨어짐. 실행위원들의 위상제고와 활동구조 재편이 필요.
- 3) 자원활동 : 상근·반상근 자원활동인력이 축소되면서 실무역량 약화. 국차원의 통합 관리 이후 연수원생 참여 낮아짐.

2. 사업적인 측면

1) 기획정책사업

- ① 임대주택관리법 제정, 공동주택관리령 개정 추진하여 연말 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정부안이 상당수 반영).
- ② 아파트 부정비리 사건에 대한 대응.
- ③ 공동체 프로그램 개발과 단지내 직접적인 공동체운동 실험은 여전히 담보상태.

2) 지역네트워크

- 전국적인 아파트공동체운동이 활성화. 8월 전국활동가워크숍을 통해 네트워크 형성 시도

3) 일상사업

- ① 상담 : 아파트비리사건을 계기로 상담 폭주
- ② 교육 : 단지 및 지역단체에 강좌 개설, 주민활동가양성 교육에 주력. 자체 조직사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강화, 강사인력 확충 시급

II. 2000년 사업계획

1. 사업 목표

- 1) 아파트 공동체 운동의 원년
- 2) 살기좋은 아파트를 위한 3대 제도개선 사업
- 3) 회원조직을 건강하게! - 회비납부를 50%, 회원수 400명 확보

2. 주요사업계획

1) <공동체마을 만들기> 운동을 위한 토대 다지기

- ① 독자적인 실행팀 구성(김칠준/서종균/최병순/심현천 등)
- ②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한 문화단체(혹은 팀)와의 네트워크 형성
- ③ 세부실행 일정

- 1/4분기 공동체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단지 & 활동가 찾기 / 현장조사
- 2/4분기 주민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진행
- 3/4분기 주민이 주체가 된 공동체 프로그램 실험
- 4/4분기 평가 및 프로그램 안정화 작업

2) 3대 제도개선 사업

- 제도개선팀 구성(김남근/강영모/심현천) → 3대과제 선정
- 구체적 법률검토 및 과제별 일정수립

<3대 과제>

- 아파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운동 - 일조권 등
- 분양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운동
- 임대주택법 관련 시행세칙 개정 및 임대주택법 개정운동

3) 건강한 회원조직을 위해

- ① 자원활동 인력 확충 : 업무 분류/일상사업 진행주체를 자원활동 인력으로 배치
- ② 상반기 : 회원정리 / 회비납부 독려, 회비납부를 40%선 확보

- ③ 하반기 : 상담, 교육 등 일상사업을 통한 회원확대 / 다양한 자료 서비스 / 연내 회원 400명으로 확대 (99년 12월, 240여명)

4) 기타

- ① 교육 : 참여사회아카데미 봄/가을 강좌에 주민활동가양성을 위한 강좌 고정 배치
- ② 상담 : 수요상담실 개설. 상담을 통한 사례 축적

● 경제민주화위원회

I. 1999년 사업보고

1. 소액주주운동의 대상 기업을 5대 재벌 계열사로 확대하여 주주총회 참가, 대표소송 등 소수주주권 행사
2. 주주총회 의결권위임운동은 절대적 지분 부족으로 한계. 대신, 적은 지분으로도 재벌 체제를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적 수단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3.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이나 분식회계를 한 회계법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앞으로도 경영감시주체인 기관투자자,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
4. 재벌개혁감시단과 경제민주화위원회가 통합하여 재벌정책, 금융정책, 기업지배구조개선 관련 등 정책이나 법·제도적인 면 활동 보강
5. 99년 사업목표였던 기업감시센터 설립안은 장기적으로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함

II. 2000년 사업계획

1. 사업 목표

- 1) 4대재벌 소액주주운동 대상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안정화
- 2) 재벌계열 금융기관, 기타 기관투자자의 경영정상화와 기업감시주체로서의 역할 제고
- 3) 소액주주운동 저변확대, 주체발굴

2. 주요사업계획

- 1) 4대 재벌 소액주주운동
 - ① 대우를 제외한 4대 재벌 계열사 대상으로 차별적 전략 구사
 - ②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 운동 제한적 활용
 - ③ 장부열람권 행사 등 전략적 소수주주권 행사
 - ④ 부당내부거래, 부실계열사 지원, 계열금융회사를 동원한 불법 자금거래 등에 대해 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
- 2) 기관투자자, 회계법인 등 경영감시주체에 대한 감시 활동
 - ① 기관투자자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문제
 - ② 재벌 계열 금융회사들의 자금 운용 실태 조사
 - ③ 분식회계 회계법인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 3) 기타 기업비리에 대한 법적 대응
- 4) 재벌정책 감시와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
 - ① 개혁통신 등 참여연대 출판물을 통한 재벌정책, 기타 사업화하지 않는 사안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
 - ② 기업지배구조 개선안 법제화 추진
- 5) 출판, 교육사업
 - ① 지난 3년간의 소액주주운동 경험을 망라하여 기념자료집 등 출판
 - ②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

● 사회복지위원회

I. 1999년 사업보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의약분업, 의료보험통합일원화 등 제도적 성과를 얻어냄.
2. 사안별 연대사업을 진행하여 성과를 거두었으나 상대적으로 위원회 독자적 사업이 부진함.
3. 성과로 얻은 제도적 장치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미비점 보완이 과제로 남음.

II. 2000년 사업계획

1. 사업목표

- 1)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보완작업
- 2) 시민참여 캠페인 및 제도개선 등 시민과 함께 하는 복지운동 전개
- 3) 지속적인 복지에산 확보운동

2. 주요사업계획

- 1) 사회보험제도의 개혁
 - ① 국민연금 제도의 현재 노정된 문제점을 보강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설계 및 대응
 - ② 4대보험 통합
 - 통합에 대한 의견수렴 및 이슈화 전략 모색
 - 관리운영체제의 정비 및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대응
 - 4대보험 적용대상에서 현실적으로 제외된 계층포괄 전략수립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니터링
 - 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대한 점검 및 의견반영
 - ② 예산확보, 급여수준, 행정인프라 구축에 대한 점검과 대응
- 3) 총선 대응
 - ① 반 복지 인물에 대한 공천반대, 낙선반대 전개
 - ② 각 당, 후보자의 총선공약 평가

- 4) 예산감시 및 예산확보운동
 - 복지예산 중 몇 개의 분야를 설정하여 예산의 쓰임새에 대한 감시활동
- 5) 빈곤감시시스템 구축
 - ① 10월에 개최되는 ASEM 한국민간단체 포럼 빈곤분과 참여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NGO의 역할에 대한 국제적 정보교류 및 국내상황 보고
 - ② UNDP 빈곤보고서 후속작업 진행 예정
- 6) 사회권 인식 저변확대 및 관련 캠페인 전개
 - ①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식의 저변확대를 위한 활동가 교육진행
 - ② 아동권, 시설수용자 인권 등 사안별 캠페인 전개
- 7) 복지운동의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 ① 복지운동의 성과와 전략에 대한 지역,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
 - ② 복지문제에 대해 증폭되고 있는 계층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략적 연대파트너 수립을 위한 단계적 접근 시도
- 8) 보건의료
 - ① 의약분업의 성공적 실시를 위한 제도보완작업
 - ② 의보수가·진료비세부내역 공개에 따른 소비자권리찾기운동 진행
 - ③ 수가체계개선, 보험적용확대 등 의료의 공공재적 성격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개혁과제 추진
- 9) 일상사업
 - ① 복지동향 편집에 사회복지계의 광범위한 참여 활성화, 독자층 확대
 - ② 홈페이지 활성화
 - 복지정보는 사회복지홈페이지로 통한다 : 자료실과 게시판은 복지정보 창고로
 - 복지논쟁의 중심 : 증폭되는 복지관련 이슈에 대한 토론의 장을 여는 토론방 개설
 - ③ 자원활동가 발굴 및 업무세분화

● 시민과학센터

1. 제도연구위원회(신설)

☞ <과학기술발전의 민주적 통제방안 연구(가제)> 보고서 출간

- 1) 여태까지 경쟁력과 효율성의 가치만을 추구하였던 과학기술 연구개발방식이 보다 인간과 자연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민주적 통제방안의 내용들을 주로 서구와 일본에서 이루어졌던 경험들을 참고하여 정리

- 2) 구체적으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지게 된 '합의회의'처럼 과학기술정책이나 연구개발과정에서의 시민참여를 목표로 개발된 참여민주주의적 모델들을 중점적으로 발굴
- 3) 이를 우리의 사회적 맥락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시민참여모델로 재구성

2. STS(Science, Technology & Society)교육위원회

- 1) 2차 자료집 『가치를 꿈꾸는 과학 2』 발행
 - 10개의 주제에 대하여 학생 및 교사용 자료를 함께 실어 2000년 2월말 발행
- 2) 2차 자료집을 활용한 현장 교사와의 모임 갖기
 - 발행한 자료집에 대한 평가회 겸 3차 자료집 발행에 대한 의견 수렴

3. 시민교육위원회

- 1) 시민과학강좌의 방향: 연구 및 실천의 결합, 우리 사회의 담론 형성에 기여
 - ① 우리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특히, 제도연구)와 실천이 강의 내용에 포함
 - ② 과학기술과 연관된 일반론을 다루면서도 사회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과학과 연관된 생산적인 담론을 생산할 수 있는 강좌
- 2) 시민강좌를 위한 전문적인 강사진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① 시민강좌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강사진 발굴
 - ② 강사진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시민강좌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 ③ 강사진으로 시민교육분과를 구성해서 지속적인 연구, 개발, 평가의 체계 구축

4. <시민과학> · 웹사이트팀

- 1) 연 10회 발간, <시민과학센터>의 활동 소개 및 다양한 읽을거리 제공.
- 2) 기존에 발간된 『시민과학』들에 대한 체계적인 DB작업, 편집진 개편 · 보강
- 3) 웹사이트 : <시민과학센터> 활동 소개 및 홍보, 『시민과학』 인터넷 상 서비스

5. 시민활동위원회(신설)

- 1) 생명공학팀 : 생명공학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 운동에 주력
 - ① 국회에 상정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인간복제금지법안 모니터하고 생명윤리 및 생명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규제법안이 제정 및 개정되도록 활동
 - ②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 활동
- 2) 과학기술 예산감시팀
 - 예산사용의 투명성, 과학기술 투자 예산이 과연 사회적 가치(인권, 환경, 복지 등)에 부합되도록 편성하고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시
- 3) 실험실안전팀
 - 서울대의 원자력공학과 폭발사고와 관련된 대책위원회와 연대하여 실험실 안전 이슈를 사회적 의제화하고 그 해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

6. 여성위원회(준)

- 1)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여성의 문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모임 구성
- 2) 기존의 '과학기술과 여성'에 대한 논의 정리·소개

7. 사무국(신설)

- 1) 재정 구조 확립
- 2) 회원 참여 및 활동회원·자원활동가 그룹 활성화
 - ① 회원 구조 파악 (연령별, 직업별로 구분하여 파악)하여 회원 참여 프로그램 개발
 - ② 신입회원 간담회 개최 (분기별 1회씩)
 - ③ 계층별 회원간담회 개최 (예/ 연령별 회원간담회)
 - ④ 분과위원회별로 1인 이상의 활동회원 및 자원활동가 역량 개발
- 3) 분과위원회 활동 보조

● 참여사회연구소

1. 사업 목표

- 연구 모임 활성화,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 연구자를 확충하고 참여연대 다른 사업단위와 연구소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참여연대 운동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

2. 각 분과 사업계획

- 1) 이론분과
 - 경제분과이론분과 내에 시민사회 팀을 새롭게 구성하여 시민사회 일반, 한국 시민운동론 등을 연구과제로 하여 진행할 예정임.
- 2) 경제분과
 - ① 5대제벌백서 증보판 준비 : 2000년 2월 중, 분석기간 98년-99
 - ② 현재로서는 대안체제팀에 협력하는 수준에서 경제팀을 운영할 예정임
 - ③ 현안문제가 발생하면 현안에 맞는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임
- 3) 통일분과
 - ① 일본 재무장과 동북아 안보·평화 관련 학술회의 및 단행본 출간
 - ② 대북·통일정책 관련 분과 회의 : 분기별 1회 개최 예정
- 4) 언론분과
- 5) 사회복지분과
 - 인원보충 필요, 이론개발-운동적 차원 분리 작업필요, 이론적 아이템 개발, 조사연구

3. 각 팀 사업계획

1) 대안체제팀

① 사업기간 : 2000년도 1년간

② 사업 필요성

- 개별적인 개혁과제를 전체적인 방향성 아래 조정하고 향후 개혁의 준거를 마련

③ 사업계획

- 내부 입장조율 → 각 현장영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초청 세미나 → 주요 주제 중심으로 내부발표 → 각자 전문 연구주제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 → 원고수정 및 완성 → 출판 → 출판기념회 겸 「한국사회의 대안체제」를 주제로 한 심포지움 개최

2) 시민사회팀

① 단행본 발간 및 심포지움 개최

② 책의 취지

- “새로운 시민” 개념에 입각하여 시민사회 단체에 의한 공공선의 부활의 의미를 밝히고, 기존의 “시민사회”론에 대한 총체적인 재해석 시도

3) 정치팀

① 월 1-2회 정기적인 회의 및 세미나

② 작업 내용

- 정기적 정세분석, 시민단체 정치관련 활동 점검
- 정치 관련 시민운동 방향 논의
- 정치 관련 정책대안 제시

예) 유권자 선택 지침 / 선거제도 / 정치자금 / 권력구조(대통령제와 내각제)

- 참여민주주의 구체적 대안 마련

③ 심포지움

- 2,000년 4·13 총선평가 심포지움(예정)

④ 단행본 발간

4) 복지팀

① 99년도 UNDP작업 팀을 재편하여 한국식의 노동/복지/경제 모델을 구상하는 연구모임으로 발전

② ‘제3의 길’과 ‘DJ노믹스’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출발점으로 하여 UNDP나 여타 기관에서 관련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으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연구활동 수행

4. 정책포럼

- 1) 참여연대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향후 해야할 사업에 관해 당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회 의견청취를 하고 그 결과를 참여사회나 기타 방법으로 공개하여 시민운동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

2) 일시 : 매월 셋째주 금요일 오후 7시 - 10시

5. Position Paper

- 1) 참여연대 연구소 입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position paper를 제출, 이를 통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운동의 정치 관련 활동에 필요한 논지를 제공
- 2) 운영방안
 - 연구간사, 연구실장이 참여연대 실무진과 상의→ 주제 결정(운영위)→ 적절한 전공학자에게 부탁→ 검토 토론회(다음 운영위원회)→ 공표 : 『참여사회』
- 3) 1년 단위로 소책자 발간 검토 요

6. Project 진행

● 참여사회아카데미

I. 1999년 사업보고

1. 성과

- 1) 위탁교육 실험의 원년, 활성화
 - ① 일등여수아카데미 : 지자체
 - ② 행복한 세상 백화점 문화센터 : 백화점 문화센터
 - ③ 광명시 평생학습센터 : 패러다임 강좌
- 2) 재단 프로젝트 수행(2차)
 - ① 1차 : 5월-7월(3개월 과정)
 - ② 2차 : 9월 -11월(3개월 과정)
- 3) 정규강좌
 - ① 99년 봄학기 ~ 가을학기 : 18개 강좌 진행
 - ②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 워크숍은 새롭게 시도한 교육방법
- 4) 시민교육 연대사업
 -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입법청원단계
- 5) 강좌를 통해 많은 자원활동가 배출, 회원가입 유도
 - 자원활동가 : 강좌지원 업무 및 자료정리
- 6) 강사DB구축

7) 출판

- 재단의 프로젝트로 2개 강좌 자료집이 2권으로 한울출판사에서 2000년 초에 출간될 예정

2. 한계

- 1) 위탁교육은 활성화된 반면 정규강좌는 신규프로그램의 부재로 침체. 따라서 프로그램 기획력의 보강 시급.
- 2) 참여중심의 프로그램 연구모임 진행되고 있으나 성과는 없음.

II. 2000년 사업계획

1. 사업목표와 사업의 방향

- 1)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강화 - 법인설립
 - 학점은행제, 사이버 강좌, 이동강좌 등의 시너지 효과
- 2)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자료집 제작
 - ① 회원/자원활동가 교육의 강화
 - ② 일반시민대상의 다양한 강좌 개발
- 3) 부서 홈페이지 구축, 사이버 강좌 운영
 - 각종 자료서비스 및 통신강좌에 대한 요구 급증
- 4) 홍보의 다각화
- 5) 교육위원회 활성화

2. 2000년 주요일정

- 1) 겨울학기 1월 ~ 2월
- 2) 봄학기 3월 ~ 5월
- 3) 여름학기 6월 ~ 7월
- 4) 가을학기 9월 ~ 11월

● 월간 참여사회

1. 사업 목표

- 1) NGO전문지로서 위상 강화
- 2) 참여연대 운동의 대중적 확산과 시민운동의 대중화에 기여

2. 주요사업방향

1) 지면채신

① 읽기 편하게

- 일반 서민들의 시선을 잡을 수 있는 소재. 시민운동 이슈도 부드럽게 가공
- 지면 디자인을 세련되게 개선

② 이해하기 쉽게

- 사진, 그래픽, 도표 등을 적극 활용, 내고 비중 제고, 전문 필자 리스트 확보, 딱딱한 내용의 외교 교열

③ 다양한 읽을거리와 풍부한 정보

- 쉬어가는 페이지 신설
- 타 매체와 차별되는 정보(시민운동) 제공
- 시민운동단체 실무자중 핵심역량 10명을 객원기자로 임명하여 '시민운동 통신란' 운영
- 시민운동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을 위한 길라잡이

④ 시민들과 지면 함께 만들기

- 시민참여공간 확보, 예> 의견란을 신설해 광고료를 받고 운영
- '사랑방' '와글와글' 등을 통해 쌍방향 매체 지향.
- 모니터 요원제 운영
- 인터넷 등의 쌍방향 통신 적극 활용. 독립적인 웹진 검토

2) 내부 역량 충원

① 인력충원

- 기자 및 광고 영업

② 참여사회 지원 풀 내실화와 확대

- 편집기획위원 중 시민운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타단체 실무자 포함
- 편집자문위원회 강화
- 일반 독자 또는 회원 중 20명을 모니터팀으로 구성
- 자원활동 기자, 객원기자 풀 확대

3) 재정 현황과 운용 방향

① 광고주의 다각화

- 새로운 광고주 발굴 : 건설한 중소기업, 의견광고, 시민단체 광고 등 광고주 다각화

② 독자확대 운동 (2000년 상반기)

- 현재는 회원 의존도가 높으나 월간 참여사회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일반 독자배가운동 시작
- 1차 독자확대 기간 (2월1일~3월1일, 2천명 목표)
 - 시민운동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또는 진보적 시각을 가진 시민
 - 기존 구독자,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회원, 전국 대학, 노동조합 등 집중 공략
 - 은행, 농협,기자협회, PD연합회, 국회의원, 관공서 접촉
- 2차 독자확대 기간 (3월2일~5월2일, 3천명 목표)
 - 시민운동의 잠재적 지지층 공략
 - 각 대학 주변 또는 각 지역 대형 서점
 - 인터넷, 통신을 통해 최대한 홍보
 - 전문 텔레마케팅 업체에게 대행하는 방식

③ 사업

- 포토뱅크 사업 - 시민운동 관련 사진 자료화
- '참여사회 캠페인' - 매달 본지 캠페인 또는 시민운동의 파워풀 캠페인을 선정, 보도하고 캠페인의 취지에 동감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체 광고 또는 인터넷 모금운동. 모금된 돈은 본지 또는 관련 시민단체로 전달.

3. 회계보고 및 결산

I. 회계기간 : 99년 1월 1일 ~ 99년 12월 31일

II. 회계보고

1. 총평

저는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참여연대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장부를 감사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목할만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회계장부는 사실상의 수입지출내역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1999년의 이월금을 제외한 순수입은 741,474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약5%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수익 및 후원금수입의 감소가 그 주원인으로 판단되는 바, 2000년에는 수익사업을 좀 더 활발히 펼쳐야 할 것입니다. 한편, 회비수입은 380,432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00%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회원의 증가 및 회비자동이체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99년의 전체 회비수입 중 자동이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60%되는 바, 2000년에는 이 비율을 더 높여 회비수입의 안정화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99년의 인건비지출은 321,629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8%가량 증가한 반면, 상근간사의 수는 30%증가하였습니다. 이는 1인당 인건비지출액은 오히려 감소하였음을 뜻합니다. 회원을 증가시키고 다양한 수입원을 발굴하여 상근간사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1999년 12월 31일 현재의 자산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 : 현금예금(기금현황)

- 평생회비 : 1999년 12월 31일 현재 적립금 62,965,450원
- 복지기금 : 1999년 12월 31일 현재 적립금 2,378,457원
- 공익변호사기금 : 1999년 12월 31일 현재 적립금 37,322,049원
- 공간개선 및 정보화 기금 : 1999년 12월 31일 현재 적립금 15,989,802원
(각각의 기금은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적립)

◦ 비품

- 컴퓨터 팬티엄 25대 / 복사기 1대 / 팩스 2대 / 음향시설 1set / TV 2대 /
프린터 10대 / 냉온풍기 캐비닛형 3대 벽걸이형 에어컨5대
- 임차보증금 : 4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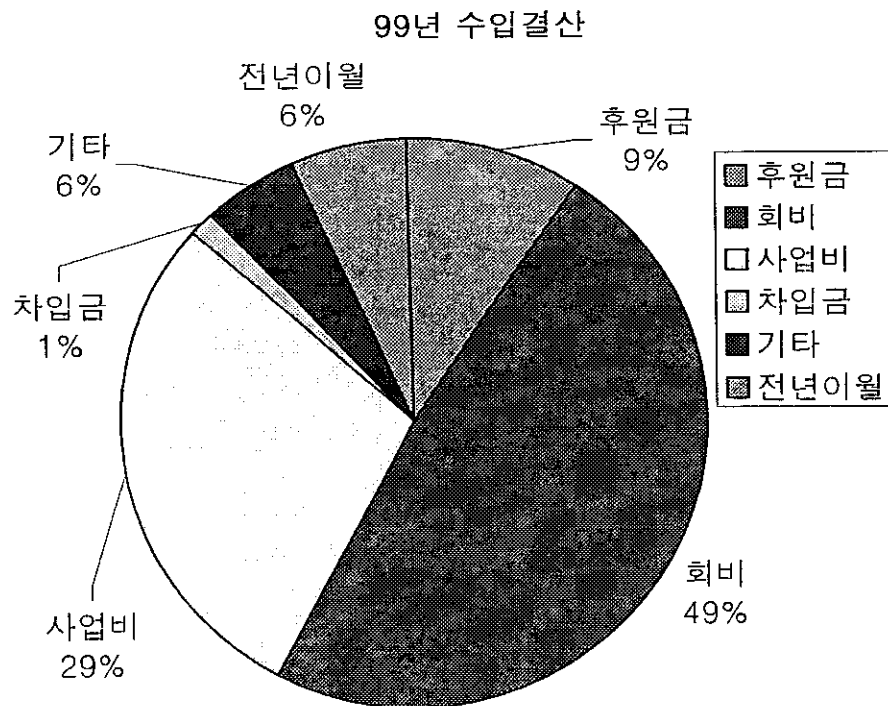
2. 일반회계

· 참여연대 99년 전체예산 결산 및 예산

1. 수입

항목		99년 결산액	%	2000년 예산액	%
회비	회비	₩ 380,432,704	48.1%	₩ 540,000,000	42.1%
후원금	후원금	₩ 75,181,801	9.5%	₩ 103,600,000	8.1%
사업비	보험사업	₩ 26,300,000	3.3%	₩ 60,000,000	4.7%
	사업수익	₩ 206,078,809	26.0%	₩ 303,000,000	23.6%
	기타수입	₩ 45,379,777	5.7%	₩ 55,170,000	4.3%
소계		₩ 733,373,091	92.6%	₩ 1,061,670,000	82.7%
기타	차입금	₩ 8,100,000	1.0%	₩ 100,000,000	
	소계	₩ 8,100,000	1.0%	₩ 100,000,000	
전년도이월	전년도이월	₩ 50,265,979	6.3%	₩ 122,426,189	9.5%
계	총계	₩ 791,739,070	100.0%	₩ 1,284,096,18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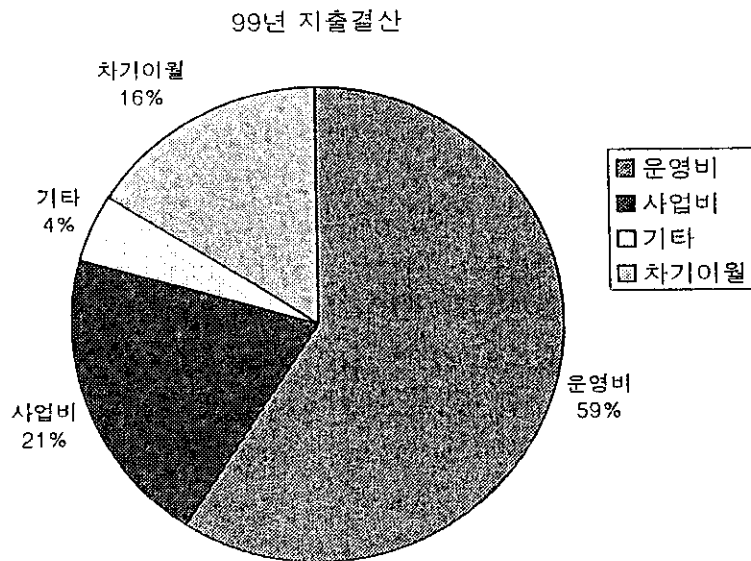
* 사업수익은 정책실 프로젝트(빈곤프로젝트 및 동아일보 프로젝트) 수익이 포함
 * 회비 : 회원확대사업으로 회비 지속적 증가 기대(다음 '99년 회비증가추이' 그래프와 '2000년 월별 회비추정' 그래프 참조)



2.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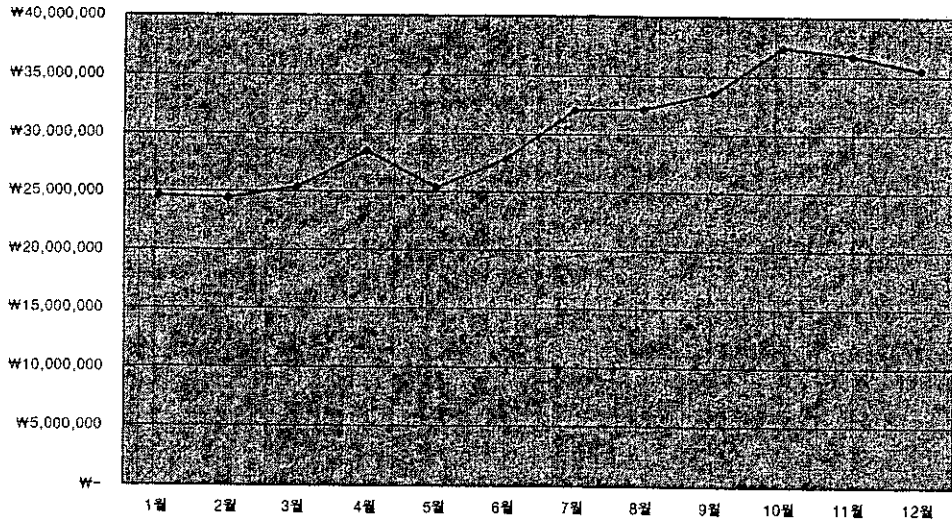
	항목	99년 결산액	%	2000년 예산액	%
운영비	인건비	₩ 321,629,641	40.6%	₩ 471,840,000	36.7%
	사무실운영 외	₩ 144,392,286	18.2%	₩ 217,443,500	16.9%
사업비	회원행사	₩ 118,365,293	15.0%	₩ 243,800,000	19.0%
	출판홍보비	₩ 35,919,756	4.5%	₩ 183,850,000	14.3%
	조사연구비	₩ 10,546,690	1.3%	₩ 10,000,000	0.8%
	기타지출	₩ 34,826,620	4.4%	₩ 35,900,000	2.8%
	소계	₩ 665,680,286	84.1%	₩ 1,162,833,500	87.8%
기타	차기이월	₩ 126,058,784	15.9%	₩ 121,262,689	9.4%
	소계	₩ 126,058,784	15.9%	₩ 121,262,689	9.4%
계	총계	₩ 791,739,070	100.0%	₩ 1,284,096,189	100.0%

*문화사업국 참여사회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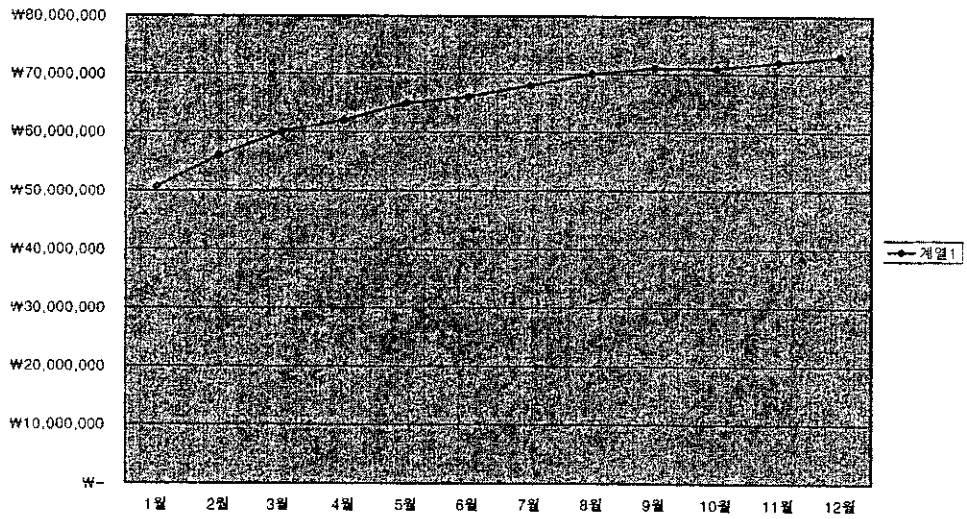


* 참고

99년 회비증가추이



2000년 월별회비추경



3. 특별회계 : 각 기구별 회계 (99년 결산 및 2000년 예산안)

· 사무국 99년 결산 및 2000년 예산안

① 수입

관	항목	결산액	%	예산액	%	비고
후원금	후원금	₩10,377,986	2.0%	₩25,000,000	3.0%	
회비	cms	₩211,051,920	40.1%	₩300,000,000	36.3%	
	은행	₩60,847,500	11.6%	₩105,000,000	12.7%	
	지로	₩83,539,677	15.9%	₩120,000,000	14.5%	
	기타	₩8,004,100	1.5%	₩15,000,000	1.8%	
	소 계	₩363,443,197	69.0%	₩540,000,000	65.4%	
사업비	행사수익(후원행사포함)	₩80,100,000	15.2%	₩150,000,000	18.2%	
	보험수익	₩26,300,000	5.0%	₩60,000,000	7.3%	
	느티나무수익	₩4,200,000	0.8%	₩10,000,000	1.2%	
	2층관리비	₩5,133,727	1.0%		0.0%	
	정책실사업수익	₩6,000,000	1.1%		0.0%	
	기증품전수익	₩1,600,000	0.3%	₩20,000,000	2.4%	
	특수사업비,ARS수익	₩5,394,000	1.0%	₩5,000,000	0.6%	
	기타	₩35,000	0.0%		0.0%	
	소 계	₩128,762,727	24.4%	₩245,000,000	29.7%	
기타	자료판매 외	₩6,580,160	1.2%	₩5,000,000	0.6%	
	소 계	₩6,580,160	1.2%	₩5,000,000	0.6%	
잡수입		₩1,775,264	0.3%		0.0%	
	소 계	₩1,775,264	0.3%		0.0%	
수 입 합 계		₩510,939,334	97.0%	₩815,000,000	98.7%	
전 년 이 월		₩15,871,251	3.0%	₩10,991,433	1.3%	
총 계		₩526,810,585	100.0%	₩825,991,433	100.0%	

② 지출

관	항 목	결산액	%	예산액	%	비고	
운영비	인건비	급여	₩243,009,456	47.1%	₩432,000,000	47.3%	
		국민연금,의보	₩25,892,505	5.0%	₩37,200,000	4.1%	
		갑근세	₩146,365	0.0%	₩240,000	0.0%	
		기타	₩1,628,780	0.3%			
		소 계	₩270,677,106	52.5%	₩469,440,000	51.4%	
	관리비	전화	₩28,000,773	5.4%	₩4,200,000	0.5%	
		통신	₩4,373,130	0.8%	₩2,400,000	0.3%	
		빌딩관리비	₩44,488,169	8.6%	₩66,000,000	7.2%	
		관리잡비	₩3,839,222	0.7%	₩6,000,000	0.7%	
		사무용품	₩3,772,664	0.7%	₩5,000,000	0.5%	
		회의비	₩68,000	0.0%	₩1,000,000	0.1%	
		기타발송	₩5,190,040	1.0%	₩1,200,000	0.1%	
		기기구입	₩12,663,200	2.5%	₩15,000,000	1.6%	
		냉난방비	₩998,000	0.2%	₩5,000,000	0.5%	
		기기소모품	₩12,602,691	2.4%	₩2,400,000	0.3%	
기타	₩1,797,620	0.3%	₩5,000,000	0.5%			
소 계	₩117,793,509	22.8%	₩113,200,000	12.4%			
운영비 계		₩388,470,615	75%	₩582,640,000	64%		
사업비	회원사업	회원사업	₩11,671,960	2.3%	₩18,000,000	2.0%	예비비
		발송	₩17,183,140	3.3%	₩36,000,000	3.9%	
		총회	₩2,057,740	0.4%	₩3,000,000	0.3%	
		광고 및 홍보	₩150,000	0.0%	₩36,000,000	3.9%	
		참여사회구입비		0.0%	₩48,000,000	5.3%	
		연대사업비	₩6,549,585	1.3%	₩2,400,000	0.3%	
		기타	₩495,510	0.1%	₩5,000,000	0.5%	
	소 계	₩38,107,935	7.4%	₩148,400,000	16.3%		
	조사 연구비	구독료	₩2,449,900	0.5%	₩3,000,000	0.3%	
		자료구입	₩244,000	2.2%	₩1,200,000	0.1%	
		기타	₩83,000	0.0%			
		소 계	₩2,776,900	2.7%	₩4,200,000	0.5%	
	행사비	사무처 행사	₩322,000	0.1%	₩5,000,000	0.5%	
		부서지원		0.0%	₩6,000,000	0.7%	
		일반행사		0.0%	₩5,000,000	0.5%	
잡비			0.0%	₩10,000,000	1.1%		
소 계		₩322,000	0.1%	₩26,000,000	2.8%		
출판홍보	홍보,인쇄비	₩8,003,240	1.6%	₩ 10,000,000	1.1%		
	홈페이지제작	₩495,000	0.1%		0.0%		
	광고 및 명함	₩398,000	0.1%	₩ 5,000,000	0.5%		
	소계	₩8,896,240	1.7%	₩15,000,000	1.6%		
사업비 계		₩50,103,075	12%	₩193,600,000	21%		
기타	부서회비환급	₩62,158,852	12.1%	₩ 136,900,000	15.0%		
	차입금상환(내부)						
	차입금상환(외부)						
	채무상환(문예당 외)	₩15,086,610	2.9%				
기타소계	₩77,245,462	15.0%	₩136,900,000	15.0%			
지출 총계		₩515,819,152	100.0%	₩913,140,000	100.0%		
차기이월		₩10,991,433	2.1%	-₩87,148,567	-9.5%		

경제민주화위원회 1999년 결산

수 입			지 출			
항목	금 액	비고	관	항목	금액	비고
후원금	47,505,815		운 영 비	인 건 비	100,000	
회비	22,483,980	부서회원의 월회비		관리비	1,426,400	
사업비	13,007,504			발송비	3,000,000	휴가비-사무국지원
자료판매	47,000			회의비	2,563,417	
기타수입	11,139,438	중금사 만기회수금 등		운영비계	4,128,040	
장기예금	15,416,196	투신사 예치		출판홍보	209,300	
				회원사업비	11,427,157	
				조사연구비	3,997,100	
				출장비	340,000	
				행사비	668,150	
			특수사업비	86,700		
			사업비계	3,674,400		
			경조비	26,786,750	주식구입 등	
			사무국 기부금	35,553,100		
			대출(사무국/사법)	484,600		
			잡비	5,000,000		
			기타계	3,000,000	*탕갈	
				45,450		
				8,530,050		
수입계	109,599,933		지출계	55,510,307		
전년이월	2,656,009		차기이월	56,745,635		
총계	112,255,942					

경제민주화위원회 2000년 예산

수 입			지 출			
항목	금액	비고	관	항목	금액	비고
후원금	20,000,000		운 영 비	인건비	8,500,000	상근자 1인
회비	30,000,000			관리비	2,000,000	
사업비	15,000,000			발송비	5,000,000	
기타	500,000			회의비	500,000	
				운영비계	16,000,000	
				출판홍보	5,000,000	
				회원사업비	2,000,000	
				조사연구비	1,000,000	
				출장비	500,000	
				행사비	5,000,000	
			특수사업비	10,000,000		
			사업비계	23,500,000		
			경조비	500,000		
			잡비	100,000		
			기타계	600,000		
			수입계	65,500,000	지출계	40,100,000
			전년이월	56,745,635	차기이월	82,145,635
			총계	122,245,635		

사회복지위원회 1999년 결산

수 입			지 출				
항목	금액	비고	관	항목	금액	비고	
회비	₩9,684,360		운 영 비	인건비	₩1,290,000		
후원금	₩1,100,000			관리비	발송비		₩1,180,080
자료판매	₩650,450				관리집비		₩87,130
사업비	₩250,000				소계		₩1,267,210
기타수입	₩111,748				운영비 계		₩2,557,210
			사 업 비	사업일반	₩1,854,070		
				출판홍보	₩385,360		
				사업비 계	₩2,239,430		
			기 타	기타잡비	₩332,200		
				차임금			
				상환(내부)	₩80,000		
				기타 소계	₩412,200		
수입계	₩11,796,558		지출계	₩5,208,840			
전년이월	₩3,569,082		차기이월	₩10,156,800			
총계	₩15,365,640						

사회복지위원회 2000년 예산

수 입			지 출				
항목	금액	비고	관	항목	금액	비고	
회비	₩12,000,000		운 영 비	관리비	₩3,000,000		
행사수익	₩500,000				관리집비		₩600,000
기타수입	₩500,000				운영비계		₩3,600,000
			사 업 비	행사비	₩5,000,000		
				출판홍보	₩5,000,000		
				회원사업	₩1,000,000		
				조사연구	연구자료 구입 및 여론조사		₩8,000,000
				사업비계	₩19,000,000		
			기 타	예비비	₩500,000		
				기타소계	₩500,000		
수입계	₩13,000,000		지출계	₩23,100,000			
전년이월	₩10,156,800		차기이월	₩56,800			
총계	₩23,156,800						

시민과학센터 1999년 결산

수 입			지 출			
후원금	회비	7,903,500	운영비	급여	상근비	6,232,340
	특별회비	1,836,160			상여금	300,000
후원금 합계	9,739,660	관리비		사업장분담금	301,530	
사업비	행사수익			4,314,600	사무용품	56,050
	특수사업비			1,152,000	기기구입	40,000
사업비 합계	5,467,340			발송비	204,290	
기타	자료판매	1,306,000		회의비	31,800	
	기타수입	74,104		운영비 합계	7,166,010	
기타 합계	1,380,104	행사비		행사비	2,089,210	
합계	16,587,104			16,587,104	소식지	제작비
			인쇄비		1,440,000	
			발송비		551,650	
			출판홍보		666,000	
			특수사업비		50,000	
			조사연구비		자료구입	243,100
			출장비			
			회의참가비		20,000	
			행사비 합계		5,659,960	
		기타	126,500			
합계	16,587,104	지출합계	12,952,470			
전년이월	2,513,500	차기이월	6,148,134			
총수입	19,100,604					

시민과학센터 2000년 예산

수입			지출				
항목	금액	비고	관	항목	금액	비고	
후원금	₩1,000,000		운 영 비	인건비	₩10,080,000		
회비	₩12,000,000			발송비	₩360,000		
행사수입	₩6,000,000			관리비	관리잡비		₩240,000
기타	₩500,000			회의비	₩120,000		
				운영비계	₩10,800,000		
		사 업 비	행사비	₩4,200,000			
			출판홍보	₩4,120,000			
			자료구입	₩120,000			
			사업비계	₩8,440,000			
수입계	₩19,500,000		지출계	₩19,240,000			
전년이월	₩6,148,134		차기이월	₩6,408,134			
총계	₩25,648,134						

의정감시센터 1999년 결산

수 입			지 출			
관	항목	금액	관	항 목	금액	
후원금			운영비	인건비		
소계				관리비	사무용품 11,100	
회비	CMS	1,995,000			기기소모품	
	기타 지르 회비				기기구입	
					전화통신	
소계		1,995,000			관리잡비	
사업비	행사수익			발송비		364,600
	광고수익			회의비	실행회의	35,200
	특수사업비			운영비 합계		410,900
소계				사업비	행사비	107,400
차입금				경제청문화		
소계		0		국고보조금	51,428	
대출금상환				국감모니터	213,500	
기타	자료판매			사민회비단	136,000	
	기타수입	20,000		출판/인쇄비		
소계		20,000		홍보/인쇄비	895,000	
			사업비계	사진촬영인화	16,250	
			기타	조사연구비	18,000	
				자료구입비		
				구독료		
				특수사업비		
				교통비, 출장비		
			사업비계		1,437,578	
			기타	기타잡비	62,568	
			기타 합계		62,568	
수입합계		2,015,000	지출합계		1,911,046	
전년이월		22,770	차기이월		126,724	
총계		2,037,770				

의정감시센터 2000년 예산

수 입			지 출			
관	항목	금액	관	항 목	금액	
후원금			운영비	인건비		
소계				관리비	사무용품 100,000	
회비	CMS	5,000,000			기기소모품	
	기타				기기구입	
					발송비	500,000
소계		5,000,000			회의비	
사업비	행사수익				경조사비	
	광고수익			운영비 합계		600,000
	특수사업비			사업비	행사비	1,500,000
소계					출판홍보	2,400,000
차입금				홍보/인쇄비		
소계				조사연구비	200,000	
대출금상환				자료구입 및 여론조사		
기타	예금이자			구독료		
	기타수입			특수사업비		
소계		5,000,000	사업비계		4,100,000	
			기타	예비비	300,000	
			기타 계		300,000	
수입합계		5,000,000	지출합계		5,000,000	
전년이월		126,724	차기이월			
총계						

맑은사회만들기본부 1999년 결산

수입			지출				
관	항목	금액	관	항목	금액		
후원금		1,000,000	운영비	인건비	간사급여		
					특리후생비		
					상여금		
소계		1,000,000		관리비	사무용품	59,410	
회비	CMS	2,047,530				기기소모품	0
						기기구입	
소계		2,047,530				관리잡비	137,800
사업비	행사수익 광고수익 특수사업비	17,895,897		운영비 계	회의비	운영위/이사회	31,500
						연구팀	
소계		17,895,897		사업비 계		228,710	
차입금			사업비	행사비	행사진행비	936,100	
소계		0			제작, 인쇄비		
대출금상환 기타	자료판매 기타수입	369,540 63,378		출판홍보	발송비	301,420	
						홍보 인쇄비	305,000
					사진, 광고료	10,800	
소계		0			교통비	0	
대출금상환 기타	자료판매 기타수입	369,540 63,378		조사연구비	자료구입비	17,500	
						구독료	
						특수사업비	11,827,600
소계		432,918		사업비계		13,401,320	
			기타	예비비	26,962		
			기타 계		26,962		
수입합계		21,376,345	지출합계		13,656,992		
전년이월		1,920,019	차기이월		9,639,372		
총계		23,296,364					

맑은사회만들기 2000년 예산

수입			지출			
관	항목	금액	관	항목	금액	
후원금		1,000,000	운영비	인건비	간사급여	
				관리비	사무용품	60,000
소계		1,000,000				기기소모품
회비	CMS	2,100,000			관리잡비	110,000
소계		2,100,000		회의비	운영위/이사회	50,000
사업비	행사수익 광고수익 특수사업비	18,000,000		운영비 합계		210,000
				사업비	행사비	행사진행비
소계		18,000,000			제작, 인쇄비	5,000,000
차입금		0		출판홍보	발송비	400,000
소계		0				홍보 인쇄비
기타	자료판매 기타수입	10,000 60,000	조사연구비	교통비	0	
					자료구입비	20,000
			특수사업비	10,000,000		
소계		70,000	교통비, 출장비	10,000		
			사업비계		16,730,000	
			기타	예비비	100,000	
			기타 합계		100,000	
수입합계		21,170,000	지출합계		17,040,000	
전년이월		9,639,372	차기이월		13,719,372	
총계		30,809,372				

사법감시센터 1999년 결산

수 입			지 출		
관	항목	금액	관	항 목	금액
후원금		1,830,000	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사무용품 164,190
					기기소모품
					기기구입
				발송비	2,005,180
				회의비	326,000
소계		1,830,000	운영비 합계		2,495,370
회비	CMS	338,520	사업비	행사비	행사진행비 817,500
소계		338,520			
사업비	행사수익	100,000			
	광고수익				
소계		100,000			
차입금		3,100,000			
소계		3,100,000			
대출금상환		1,500,000			
기타	예금이자	25,651			
	기타수입	133,000			
소계		1,658,651	사업비계		4,583,080
			기타		
			기타 합계		0
수입합계		7,027,171	지출합계		7,078,450
전년이월		628,000	차기이월		576,721
총계		7,655,171			

사법감시센터 2000년 예산

수 입			지 출		
관	항목	금액	관	항 목	금액
후원금		10,000,000	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사무용품 100,000
					기기소모품 0
					관리잡비 400,000
				발송비	3,000,000
				회의비	실행회의 500,000
소계		6,000,000	운영비 합계		4,000,000
사업비	행사수익	100,000	사업비	행사비	행사진행비 500,000
	광고수익	400,000			
	특수사업비				
소계		500,000			
차입금					
소계		0			
대출금상환					
기타	자료판매	2,000,000			
	기타수입	500,000			
소계		2,500,000	사업비계		13,340,000
			기타	예비비	500,000
			기타 합계		500,000
수입합계		19,000,000	지출합계		17,840,000
전년이월		576,000	차기이월		1,736,000
총계		19,576,000			

조세팀 1999년 결산

수 입			지 출		
과	항목	금액	과	항 목	금액
후원금		2,800,000	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사무용품
					기기소모품
					기기구입
					관리잡비
					91,400
					발송비
					회의비
					50,000
					141,400
			운영비 합계		
			사업비	행사비	행사진행비
					1,118,070
				출판홍보	홍보, 인쇄비
					1,224,200
				조사연구비	자료구입 및
					여론조사
					구독료
					5,135,810
				특수사업비	
					120,000
				교통비, 출장비	
					107,300
					7,846,780
			사업비계		
			기타	사무국 지원	6,000,000
				재벌감시단 지원	1,000,000
					7,000,000
			기타 합계		
					7,000,000
			수입합계		29,899,280
			지출 합계		14,846,780
			전년이월		15,052,500
			차기 이월		
			총계		29,899,280

조세팀 2000년 예산

수 입			지 출		
관	항목	금액	관	항 목	금액
후원금		5,000,000	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사무용품 100,000
					기기소모품 0
					기기구입
					전화/통신
					관리잡비 400,000
					발송비 1,000,000
					회의비 500,000
소계		5,000,000			
회비	CMS	8,000,000			
	지료회비				
	기타				
소계		8,000,000			
사업비	행사수익		운영비 합계		1,900,000
	광고수익		사업비	행사비	행사진행비 1,000,000
	특수사업비	20,000,000			출판/인쇄비 500,000
소계		20,000,000			출판홍보
차입금					홍보, 인쇄비 2,000,000
소계		0			
대출금상환			조사연구	자료구입비	2,880,000
기타	자료판매		비	구독료	120,000
	기타수입	500,000	특수사업	비	
소계		500,000	사업비계		7,000,000
			기타	예비비	1,000,000
			기타 합계		1,000,000
수입합계		33,500,000	지출합계		10,000,000
전년이월		15,052,500	차기이월		38,552,500
총계		48,552,500			

작은권리99년 결산

수입			지출		
항목	금액	비고	항목	금액	비고
회비	11,752,259		인건비	6,662,315	
예금이자	13,641		급여 사회보험	313,590	
			관리비	사무용품 발송비 전화비	200,810 336,540 700,690
			사업비	행사비	1,249,260
			기타		169,840
			대출		100,000
수입계	11,765,900		지출계	9,733,045	
전월이월	1,465,641		차기이월	3,498,496	
총계	13,231,541				

작은권리2000년 예산

수입			지출			
항목	금액	비고	관	항목	금액	비고
회비	15,600,000		운영비	인건비	급여 사회보험료	8,968,080 313,590
후원금	2,000,000			관리비	연구 발송비 통신료	500,000 1,000,000 700,000
사업수익	3,000,000				소계	11,481,670
자료판매	1,000,000				사업비	사업비
이월금	3,498,496			기타	기타	1,000,000
기타	500,000					
수입계	25,598,496		지출계	22,481,670		

아파트공동체연구소 1999년 결산

수입			지출				
항목	금액	비고	관	항목	금액	비고	
회비	4,696,330		운영비	인건비	급여	9,150,000	
후원금	1,750,000				사회보험료	381,030	
사업수익	3,670,000			관리비	전화요금	345,330	
자료판매	1,068,400				문구	148,770	
예금이자	50,424				발송비	172,900	
				운영비계	10,198,030		
			사업비	사업비	2,328,710		
			기타	회식비	222,000		
					기타	255,500	
수입계					지출계	13,004,240	
이월금					차기이월	2,587,914	
총계						15,592,154	

아파트공동체연구소 2000년 예산

수입			지출				
항목	금액	비고	관	항목	금액	비고	
회비	9,000,000		운영비	인건비	급여	9,550,000	
후원금	2,500,000				사회보험료	381,030	
사업수익	3,000,000			관리비	문구	300,000	
자료판매	1,000,000				발송비	500,000	
기타	100,000				운영비계	10,731,030	
			사업비	사업비	3,500,000		
			기타	기타	500,000		
수입계					지출계	14,731,030	

시민사업국 1999년 결산

수 입			지 출			
항목	금액	비고	관	항목	금액	비고
후원금	₩6,268,000	*가방, 달력, 모자, 티셔츠, 배상면주 등 판매		활동비	₩5,566,200	
회비	₩815,000			회원통신	₩6,115,458	
특수사업	₩12,267,941			특수사업	₩10,673,850	
광고수입	₩1,700,000			운영비	₩1,141,690	
사무국지원	₩5,000,000			행사비	214,480	
기타수입	₩72,175			타부서지원	₩130,000	
				기타장비	₩125,210	
				시민위원회	₩1,118,000	
수입계			지출계			
₩26,123,116			₩27,084,888			
전년이월			차기이월			
₩2,097,116			₩1,136,088			
총계						
₩28,220,972						

※ 2000년 예산은 사무처 예산에 편제

포럼 참여사회 1999년 결산

수 입			지 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비고	
회비	연회비	6,140,000	운영비	급여	5,716,830
	월회비	3,860,000		사무용품	278,440
	월례토론회	800,000		기타(책값)	336,000
후원금	200,000	운영비소계		6,331,270	
책값	32,000	사업비	행사비	3,884,830	
기타-예금이자	21,005		발송비	417,990	
			경조사비	800,000	
			회비분담금	986,500	
소계	11,053,005		회의비	30,000	
			사무국지원	1,300,000	
			사업비소계	7,419,320	
전년도이월	3,039,932	총계	13,750,590		
총계	14,092,937	이월	342,347		

포럼 참여사회 2000년 예산

수 입			지 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비고	
회비	연회비	7,000,000	운영비	발송비	800,000
	월회비	5,000,000		사무용품	250,000
	월례토론회	1,200,000		기타잡비	200,000
기타수입	100,000	소계		1,250,000	
후원금	1,000,000	사업비	행사비	4,500,000	
소계	14,300,000		경조사비	1,500,000	
			회비분담금	1,200,000	
			회의비	200,000	
전년도이월	342,347		사무국지원	1,000,000	
		소계	8,400,000		
		예비비	4,000,000		
총계	14,642,347	총계	13,650,000		
		이월	992,347		

문화사업국 1999년 결산

수입			지출		
관	항목	금액	관	항목	금액
후원금		1,650,000	운영비	인건비	
소계	1,650,000			관리비	사무용품 55,100 기기소모품
				발송비	699,050
				회의비	173,500
				강조사비	0
사업비	행사수익 211,004,000 광고수익 2,000,000	213,004,000	운영비 계		872,550
소계	213,004,000		사업비	행사비	행사진행비 32,644,250
차입금				출판홍보	홍보, 인쇄비 16,968,200
소계	0			조사연구비	자료구입 및 여론조사 0
이자수입		307,798		교통비, 출장비	169,000
소계	0		사업비계		49,781,450
			기타	사무국 지원	65,000,000
			기타 합계		65,000,000
수입합계		214,961,798	지출합계		115,654,000
전년이월			차기이월		99,307,798
총계		214,961,798			

문화사업국 2000년 예산

수입			지출		
관	항목	금액	관	항목	금액
후원금		500,000,000	운영비	인건비	
소계	500,000,000			관리비	사무용품 1,000,000 기기소모품 0 기기구입 전화/통신 관리잡비 1,000,000
				발송비	5,000,000
				회의비	홍보시절단 등 1,000,000
				운영비 계	
사업비	행사수익 500,000,000 광고수익 특수사업비 20,000,000	520,000,000	사업비	행사비	행사진행비 30,000,000
소계	520,000,000			출판홍보	출판/인쇄비 10,000,000
차입금				사무국 지원	300,000,000
소계	0			조사연구비	자료구입비 1,000,000 구독료 120,000
대출금상환				특수사업비	5,000,000
기타	자료판매 기타수입 2,000,000	2,000,000		교통비, 출장비	
소계	2,000,000			사업비계	
			기타	예비비 10,000,000	
			기타 합계		10,000,000
수입합계		1,022,000,000	지출합계		364,120,000
전년이월		99,307,798	차기이월		757,187,798
총계		1,121,307,798			

참여사회아카데미 1999년결산

수 입			지 출			
항목	금액	비고	관	항목	금액	비고
수강료	₩22,122,600		운 영 비	강사료	₩8,454,600	
자료판매	₩677,011			강사접대비	₩316,000	
특수사업비	₩71,480,300			관리비	₩461,520	
기타	₩434,190			사무용품 관리잡비 회의비	₩2,688,180 ₩553,800	
				운영비계	₩12,474,100	
			사 업 비	출판홍보	₩370,500	
				홍보물제작	₩9,575,900	
				광고비	₩1,459,300	
				교재제작	₩213,200	
				행사비	₩261,500	
				조사연구	₩25,000	
				회의참가	₩51,627,950	
				특수사업비	₩51,627,950	
				사업비계	₩63,533,350	
			기 타	기타잡비	₩108,200	
				센터강좌	₩544,200	
				기타소계	₩652,400	
수입계	₩94,714,101		지출계		₩76,659,850	
전년이월	₩11,542,837		차기이월		₩29,597,088	
총계	₩106,256,938					

참여사회아카데미 2000년 예산

수 입			지 출			
항목	금액	비고	관	항목	금액	비고
수강료	₩16,000,000		운 영 비	관리비	₩400,000	
자료판매	₩1,000,000			사무용품 관리잡비 회의비	₩1,200,000 ₩400,000	
기타	₩100,000			강사료	₩6,000,000	
				운영비계	₩8,000,000	
			사 업 비	출판홍보	₩400,000	
				홍보물제작	₩6,000,000	
				광고비	₩400,000	
				교재제작	₩400,000	
				행사비	₩400,000	
				조사연구	₩200,000	
				자료구입	₩200,000	
				사업비계	₩7,400,000	
			기 타	기타잡비	₩800,000	
				기타소계	₩80,000	
수입계	₩17,100,000		지출계		₩15,480,000	
잔액					₩1,620,000	

참여사회연구소 2000년 예산

수 입				지 출			
관	항	목	금액	관	항	목	금액
추원금	임원추원금		6,000,000	운영비	인건비	연구실장급여	11,322,720
	일반추원금		24,000,000			간사급여	9,226,920
						복리후생비	1,409,160
						상여금	1,800,000
	소계		30,000,000		관리비	사무용품	200,000
회비	임원회비		12,000,000			기기소모품	200,000
	회원회비		12,000,000			기기구입	1,000,000
						전화/통신	500,000
	소계		24,000,000			관리장비	200,000
					발송비	452,000	
					회의비	운영위원회	960,000
						이사회	800,000
						기타회의	300,000
					소계		28,370,800
사업수익	행사수익		8,000,000	사업비	행사비	정액보험	7,500,000
	특수사업수익	출판인세				3,840,000	
	소계		8,000,000		연구활동지원비	연구팀지원	7,000,000
차입금						원고료	1,000,000
대출금상환						출판홍보	200,000
	소계					시진.광고료	200,000
기타수익	광고수익		4,200,000	조사연구비		자료구입비	500,000
	기타수익	자료판매	1,800,000		구독료	1,050,000	
		예금이자	500,000		특수사업비	300,000	
		기타	7,300,000		출장비	50,000	
	소계		13,800,000		소계		21,640,000
				기타	기타장비	수수료	20,000
						검조비	100,000
					소계		120,000
	수입합계		75,800,000		지출합계		50,130,800
	전년이월		8,012,662		차기이월		33,681,862
	총계		83,812,662				

월간 참여사회 1999년 결산

수입			지출		
항목	금액	비고	항목	금액	비고
광고수입	101,105,000		운 영 비	급여	41,696,020
정기구독료 수입	8,265,500			사무용품	1,939,980
				기 타	2,000,000
판매비 수입	10,216,000		사 업 비	계	45,636,000
기 타	1,072,968			제작비	48,301,000
				원고료	14,034,900
				발송비	3,075,450
				사진비	4,654,160
				식사비	1,140,750
			기 타	3,231,300	
			계	74,437,560	
수입계	120,659,468		관 리 비	전화비	1,470,430
				편집위원	3,162,300
				아근 식대	
전년 이월	17,585,575		기타	2,467,000	
			계	7,099,730	
총 계	138,245,043		총 계	127,173,290	
			차기이월	11,071,753	

월간 참여사회 2000년 예산

수입			지출			
항목	금액	비고	관	항목	금액	비고
광고수입	₩102,000,000		운 영 비	인건비	₩50,000,000	
판매수입	₩5,000,000			관리비	사무용품	₩9,200,000
정기독자 구독수입	₩9,000,000			운영비계		₩59,200,000
회원독자 구독수입	₩31,000,000		사 업 비	제작비	₩60,000,000	
				영업비	₩5,000,000	
			사업비계		₩65,000,000	
			기 타	자료구입	₩3,000,000	
				예비비	₩3,000,000	
				채우상황	₩5,000,000	
				기타소계	₩14,000,000	
수입계	₩147,000,000		지출 계	₩138,200,000		
전년 이월	₩11,071,753		차기 이월	₩19,871,753		
총계	₩158,071,753					

4.정관개정안

※ 개정조항; 제 14조, 제15조, 제 25조, 제36조

제14조: 회원모임의 대표가 운영위원의 자격을 갖는 것을 명시

제15조: 운영위원회를 매 2개월마다 개최로 변경

제25조: 회원모임협의회의 명칭, 지위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정당활동제한을 '운영위원'까지 확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참여연대라 한다.

제2조

【목적】 참여연대 각계 각층의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참여연대는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4조

【사업】 참여연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민주사회를 바르게 세우며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방법에 관한 연구 및 토론과 시민들의 의사형성을 위한 사업 입법, 사법, 행정 등 국가기관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제도적 노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비리와 부정을 고발하며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행동 기타 참여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연대활동과 필요한 사업

제5조

【소재】 참여연대는 서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가입】 참여연대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가입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제7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참여연대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참여연대 내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8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참여연대의 정관, 내규를 지킬 의무

참여연대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

【자격상실】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참여연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3장 기구

제 1 절 총 회

제10조

【지위】 총회는 참여연대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한다.

제11조

【소집】 정기총회는 연 1회 열며,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3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권한 및 의결】 총회는 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토의, 결정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히, 정기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공동대표의 선출
3. 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선출

4.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와 감사의 선임

5. 결산 및 예산과 사업계획의 승인

제2절 운영위원회

제13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시까지 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 및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기구이다.

제14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와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활동기구의 위원장단과 전문센터의 소장단,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회원모임의 대표로 한다.

제15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매 **2개월**마다 운영위원장이 정기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운영위원 1/5이상의 요구나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6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권한】 운영위원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약간명의 부위원장을 선출하며, 집행위원장이 제청하는 집행위원 및 활동기구의 임원을 임명한다.

제3절 집행위원회

제18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상설기구이다.

제19조

【구성】 집행위원회는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활동기구와 전문센터의 위원장 및 소장,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한다.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제20조

【권한】 집행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정관에 명시된 활동기구와 센터를 조직, 관리하며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이를 위해 사무처를 설치 운영한다.

집행위원회는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4 절 공동대표, 고문, 자문위원회, 감사

제21조

【공동대표】

공동대표는 참여연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공동대표는 5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2조

【고문】 참여연대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문을 하고, 지도를 받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을 갖춘 약간명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23조

【자문위원회】 참여연대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문에 응할 각계 전문가 약간명을 자문위원으로 추대한다.

제24조

【감사】 감사는 참여연대의 사업 및 재정 업무를 감사한다.

제 5 절 활동기구

제25조

【회원모임협의회】

(지위) 회원모임협의회는 각 회원모임의 활성화와 모임간의 상호협력 및 그에 따른 다양한 활동을 담당하는 활동기구이다.

(구성) 회원모임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및 다양한 회원모임으로 구성한다.

(자율권) 회원모임협의회는 참여연대의 목적과 전체사업의 취지의 범위 안에서 각 회원모임의 민주적 의사수렴에 근거해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기타) 회원모임이라 함은 참여연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다양한 소모임을 말하며 그 결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별도의 내규로 정하도록 한다.

제26조

【정책위원회】

(지위) 정책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정책 및 연구사업을 담당하며 각 전문활동센터의 정책 기능을 지원한다.

(구성)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약간명의 부위원장, 실행위원 및 산하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제27조

【전문 활동 센터】

(종류) 참여연대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법감시센터, 의정감시센터 등 전문활동센터를 둔다.

(구성) 각 센터는 소장, 약간명의 부소장, 실행위원, 전문위원 및 실무간사로 구성한다.

(활동단위의 설치) 각 센터는 활동에 필요한 회원 또는 협조자들로 구성된 활동단위를 운영할 수 있다.

(자율권) 각 센터는 참여연대의 목적과 집행위원회가 정하는 전체 사업의 취지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28조

【사무처】 참여연대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 산하에 사무 처를 두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실장, 국장과 약간명의 부장 및 간사를 둔다.

제29조

【임원의 임기】 참여연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0조

【활동단위의 신설】 참여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의 결에 따라 활동단위를 신설할 수 있다.

제31조

【지역조직】 참여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 회의 의결에 따라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제32조

【부설연구소】 참여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설연구소로 참여사회연구소를 둔다.

제4장 제 정

제33조

【회계연도】 참여연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

【예산 및 결산】

집행위원장은 다음해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해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집행위원장은 회계년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 결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수입】 참여연대의 수입은 회원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수익으로 한다.

제5장 보 칙

제36조

【정당활동 제한】 공동대표, 고문, 운영위원장, 부설연구소 이사장과 소 장, 집행위원장, 각 센터 소장, 정책위원장,회원모임협의회장,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공직에 취임할 경우 사임하여야 한다.

제37조

【준용규정】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5년 3월 23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6년 3월 13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6년 9월 10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7년 9월 27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2월 6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2월19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정관개정안 신구조운 대비표 >

조 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 14조 운영위원회	<p>【구성】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p> <p>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와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활동기구의 위원장단과 전문센터의 소장단,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으로 한다.</p>	<p>【구성】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p> <p>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와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활동기구의 위원장단과 전문센터의 소장단,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u>회원모임의 대표</u>로 한다.</p>
제15조 운영위원회	<p>【소집】 운영위원회는 매 3개월 미다 운영위원장이 정기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운영위원 1/5이상의 요구나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p>	<p>【소집】 운영위원회는 매 2개월미다 운영위원장이 정기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운영위원 1/5이상의 요구나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p>
제25조 회원모임협의회	<p>(지위) 시민위원회는 각 회원모임의 의사수렴과 여론수렴 및 그에 따른 다양한 활동을 담당하는 활동기구이다.</p> <p>(구성) 시민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다양한 시민모임으로 구성한다.</p> <p>(자율권) 시민위원회는 참여연대의 목적과 전체사업의 취지의 범위 안에서 회원들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p>	<p>(지위) <u>회원모임협의회</u>는 각 <u>회원모임의 활성화와 모임간의 상호협력</u> 및 그에 따른 다양한 활동을 담당하는 활동기구이다.</p> <p>(구성)<u>회원모임협의회</u>는 회장과 부회장 및 다양한 회원모임으로 구성한다.</p> <p>(자율권)<u>회원모임협의회</u>는 참여연대의 목적과 전체사업의 취지의 범위 안에서 <u>각 회원모임의 민주적 의사수렴에 근거해</u>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p> <p><u>(기타) 회원모임이라 함은 참여연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다양한 소모임을 말하며 그 결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별도의 내규로 정하도록 한다.</u></p>
제36조 정당활동 제한	<p>【정당활동 제한】 공동대표, 고문, 운영위원장, 부설연구소 이사장과 소장, 집행위원장, 각 센터 소장, 정책위원장, 시민위원장,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공직에 취임할 경우 사임하여야 한다.</p>	<p>【정당활동 제한】 공동대표, 고문, 운영위원장, 부설연구소 이사장과 소장, 집행위원장, 각 센터 소장, 정책위원장, 시민위원장,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u>운영위원</u>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공직에 취임할 경우 사임하여야 한다.</p>

5. 임원명단 및 주요임원 경력

▶ 공동대표

김중배(언론인), 박상증(목사), **박은정**(교수, 이대 법학)

▶ 감 사

윤종훈(회계사)

▶ 고 문

김동호(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김선중(교수, 성대 교육학), 김승훈(신부), 김찬국(前 상지대총장), 김창국(대한변협회장), 박병호(前 서울법대 학장), 박영숙(환경사회연구소장), 박완서(문인), 박재일(한살림 대표), 박종규(바른경제동인회 회장), 오재식(한국월드비전 회장), 원경선(풀무원농장 원장), 이돈명(변호사), 이상희(상지대 이사장), 이세중(前 대한변협 회장), 이지형(성균관대 명예교수), 이효재(여성운동가), 장임원(교수, 중앙대 의대), 주섭일(중앙일보 기자), 주종환(한국사회경제학회 명예회장), 한상범(동국대 명예교수)

▶ 자문위원

강송식(한우물 대표), 강원돈(기업윤리연구소장), 강행원(민미협 대표), 곽노현(교수, 방송대 법학), 곽진(교수, 상지대 한문학), 권오승(교수, 서울대 법학), 기우봉(기술사), 김민환(교수, 고려대 신문방송학), 김선우(부산매일신문 전무), 김승균(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 김영호(교수, 경북대 사회학), 김용익(교수, 서울대 의대), 김우중(대학신문사), 김은규(신부), 김제완(변호사), 김종대(한국정보컨설팅 대표), 김창남(교수, 성공회대 신문방송학), 김형식(교수, 중앙대 사회복지학), 김호열(두레선교회 총무), 남규우(목사), 도정일(교수, 경희대 영문학), 민병석(명지대 객원교수), 박성준(기독교평론사 대표), 박연철(변호사), 박한춘(의신기자협회 회장), 백낙청(교수, 서울대 영문학), 법안(스님), 서광태(의사), 선미라(미공보원), 성유보(민언련이사장), 손덕수(교수, 효성가톨릭대 사회학), 송두환(변호사), 신동근(건치), 신동식(성공회대 겸임교수), 신영복(교수, 성공회대 사회학), 신학철(화가), 심재식(의사), **안경환**

(교수, 서울대 법학), 안해룡(ASIA PRESS INTL), 양재혁(교수, 성균관대), 여균동(영화감독), 오병철(제심관 관장), 오상현(변호사), 유중원(변호사), 윤덕홍(교수, 대구대), 윤종현(변호사), 이근복(목사), 이기우(교수, 인하대 법학), 이두식(교수, 홍대 미대), 이병혁(교수,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 이삼열(교수, 숭실대 철학), 이석원(강남병원 관리이사), 이영섭(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이영수(교수신문발행인), 이종오(교수, 계명대 사회학), 이효성(교수, 성대 신문방송학), 임정근(학술단체연합회 사무국장, 사회학박사), 임재연(변호사, 나라법무법인 대표), 임지순(교수, 서울대 물리학), 임진택(판소리 연구가), 장명봉(교수, 국민대 법학), 장선우(영화감독), 전동균(前 건치대표), 정미홍(방송인), 정준성(한국문화정책개발원 연구원), 정지영(감독), 정진성(교수, 서울대 사회학), 정현백(교수, 성균관대 사학), 조영황(변호사), 조일홍(교수, 중앙대 행정학), 조준희(변호사), 조중래(교수, 명지대 교통학), 최상석(신부), 하죽봉(변호사), 한영철(대한치과의사협회 이사), 황상근(사제), 황의인(변호사), 황주석(의정부YMCA 총무), 황지우(시인), 심재식(의사)

▶ 운영위원회 (91명)

위원장 : 양길승 (성수의원 원장)

부위원장 : 유명중(문인), 명진스님

◇ 선출직 운영위원 (48명)

강경민(목사, 남서울일산교회), 강치원(교수, 강원대), 김대환(교수, 인하대 경제학), 김용태(민예총 사무총장), 김종찬(방송인), 김준묵(미래사 대표), 김지현(김스원에이전시 대표), 도진순(교수, 창원대 역사학),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박찬욱(교수, 서울대 정치학), 박호성(교수, 서강대 정치외교학), 배강원(前 건치사무국장), 변재용(한솔출판사 사장), 송기영(변호사), 송창석(국민고충처리위원), 신광식(약사), 신윤환(교수, 서강대 정치학), 안덕상(KBS 라디오 기술국), 안영도(변호사), 양윤재(양전자시스템 대표), 우석균(인의협 기획국장), 유팔무(교수, 한림대 사회학), 이건(교수, 동국대 사회학), 이교정(前 동두천시민회 의장), 이병호(농장경영), 이옥숙(주부), 이정옥(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이창식(前 부천신문 대표), 이호열(오름시스템 대표), 임국진((주)창의와 탐구 이사), 임옥상(화가), 임통일(변호사), 장유환(Allied Develop-

ment 대표), 전운표(SBS라디오PD), 정수복(크리스찬아카데미), 정종섭(교수, 건국대 법학), 조용환(변호사), 조홍식(서울대 사회복지학), 주은경(방송작가, 성공회대 사회교육원), **채수일**(국제민주연대), 최일숙(변호사), 최자웅(신부), 최정식(국제상업사무전문기술노련 사무차장), 한면희(교수, 성균관대 철학과), 한창규(법무사), 홍수옥(키즈클럽 교수부장), 홍지웅(열린책 대표), 황병일(변호사)

◇ **당연직 운영위원 (43명)**

대표, 운영위원장단, 집행위원장단, 활동기구 위원장단, 각 센터 소장단, 사무처장단, 회원모임 대표, 기타 활동단위 임원

권진관(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장), 기우봉(산사랑), **김동춘**(정책위원장), **김상조**(경제민주화위원회, 재벌개혁감시단 단장), **김선웅**(청년마을 촌장), 김영태(포럼참여사회 운영위원장), **김은경**(열사모), 김중배(공동대표), **김진욱**(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창준**(맑은사회만들기본부 공익제보자지원단), 김칠준(아파트공동체연구소 소장), **김현숙**(통일일꾼모임), 김환석(시민과학센터 대표), **남기현**(숙년회), 명진스님(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중(공동대표), 박원순(집행위원장), **박은정**(공동대표, 참여사회편집위원장), 박진도(참여사회연구소장), 손혁재(협동처장), **심현천**(아파트공동체연구소 부소장), **양길승**(운영위원장), 오무승(뫼오름), 유명중(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광일**(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이상철(시민로비단), **이상훈**(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장), **이윤정**(우리땅), 이은영(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이정**(작지사 대표), **이광일**(참여사회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임종대**(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임현영(참여사회아카데미 원장), **장남일**(참종다), 장하성(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정의엽**(꽃지사 대표), 조희연(집행위원회 부위원장, 협동처장), 진영중(협동처장), 차병직(협동처장), 최민섭(회원모임협의회 회장), 최유미(그들의어머니회 대표), **최은순**(정보공개사업단 단장), 한인섭(사법감시센터 소장), **하승수**(정보공개사업단 실행위원장)

▶ 집행위원회

위원장 : 박원순 (사무처장 겸임)

부위원장 : 조희연

◇ 집행위원

공동대표, 운영위원장단, 집행위원장단, 정책위원장, 시민모임협의회장, 각 센터 위원장,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권진관, 김중배, 김동춘, 김철준, 김형완, 김호기, 김환석, 명진스님, 박상중, 박진도, 박원순, 박은정, 손혁재, 양길승, 유명종, 이상훈, 이은영, 임종대, 임현영, 장하성, 조희연, 진영종, 차병직, 최은순, 최민섭, 하승수, 한인섭, (의정감시센터소장)

◇ 상임집행위원회

공동대표, 운영위원장단, 집행위원장단, 정책위원장, 사무처장단

김중배, 박상중, 박은정, 양길승, 유명종, 명진스님, 박원순, 조희연, 김동춘, 손혁재, 차병직, 진영종, 김형완, 김호기, 이대훈

◇ 협동사무처장

차병직, 손혁재, 이대훈, 진영종, 김형완, 김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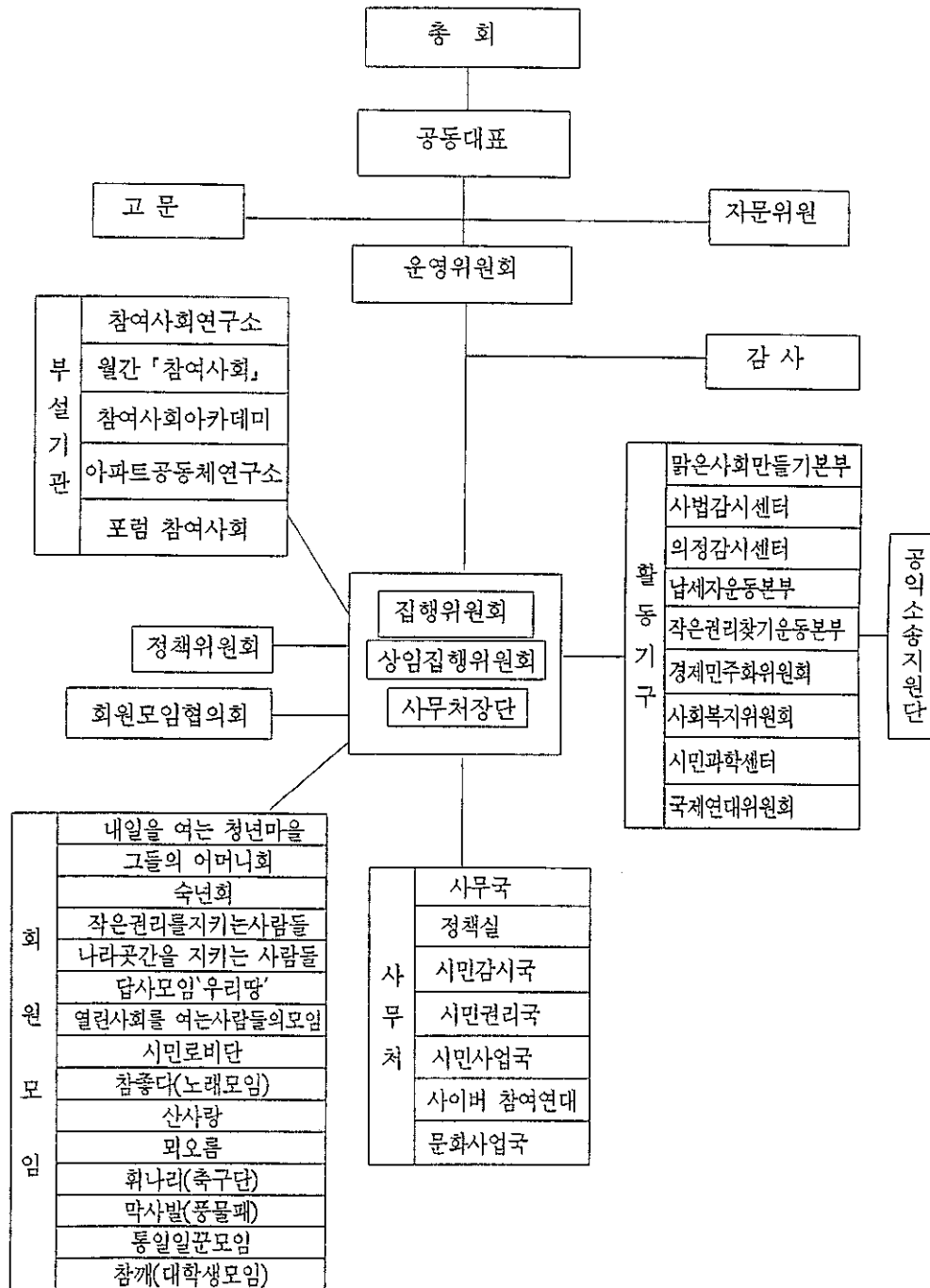
◇ 정책위원장

김동춘

* 굵은 글씨는 신임 임원입니다

6. 참여연대기구표, 사무처 직제

● 기구표(개편안)



● 사무직제

사무처장 / 박원순

협동사무처장 / 손희재 차병직 김호기 진영중 김동춘 김형완

사무국 / 국장 김성희

총무 / 이지은 최민숙

보험 / 이지은

국제연대위원회 / 양영

기획실장 / 박영선

시민사업국 / 국장 김민영

부장 박순철

최유미 송해영 김창엽 이정순 이승희 이귀보

참여사회아카데미 / 김미란 최현주

시민권리국 / 부장 박원석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 안진걸 조용연

아파트공동체연구소 / 한재연

시민감시국 / 국장 이태호

부장 양세진

이경미

사법감시센터 / 이재명

의정감시센터 / 이강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 우필호 임미옥

납세자운동본부 / 홍일표

정책실 / 실장 김기식

부실장 / 이승희

박근용 이은아 김태식

경제민주화위원회 / 부장 김은영

사회복지위원회 / 부장 문혜진

이은경 조학원

시민과학센터 / 한재각

문화사업국 / 국장 유창주

명광복 탁현민

사이버참여연대 / 어섯별

참여사회연구소 / 실장 이광일

홍석인

월간참여사회 / 편집장 김병기

기자 / 장운선 윤정은

참여연대 전화안내

• 대표전화	723 - 5300
• 회원가입문의(시민사업국)	723 - 4251
• 사무국장	723 - 0665
• 사무국	723 - 5300
국제연대위원회	723 - 4250
보험	723 - 5308
• 정책실장	723 - 5051
경제민주화위원회	723 - 5052
사회복지위원회	723 - 5056
시민과학센터	723 - 4255
• 시민사업국	723 - 4251
• 문화사업국	723 - 4254
• 시민감시국	723 - 5302
납세자운동본부	723 - 4253
• 시민권리국	723 - 5303
• 참여사회아카데미	723 - 5304
• 사이버참여연대	723 - 7105
• 월간참여사회	723 - 1246
• 참여사회연구소	723 - 9581
철학마당느티나무	720 - 1991